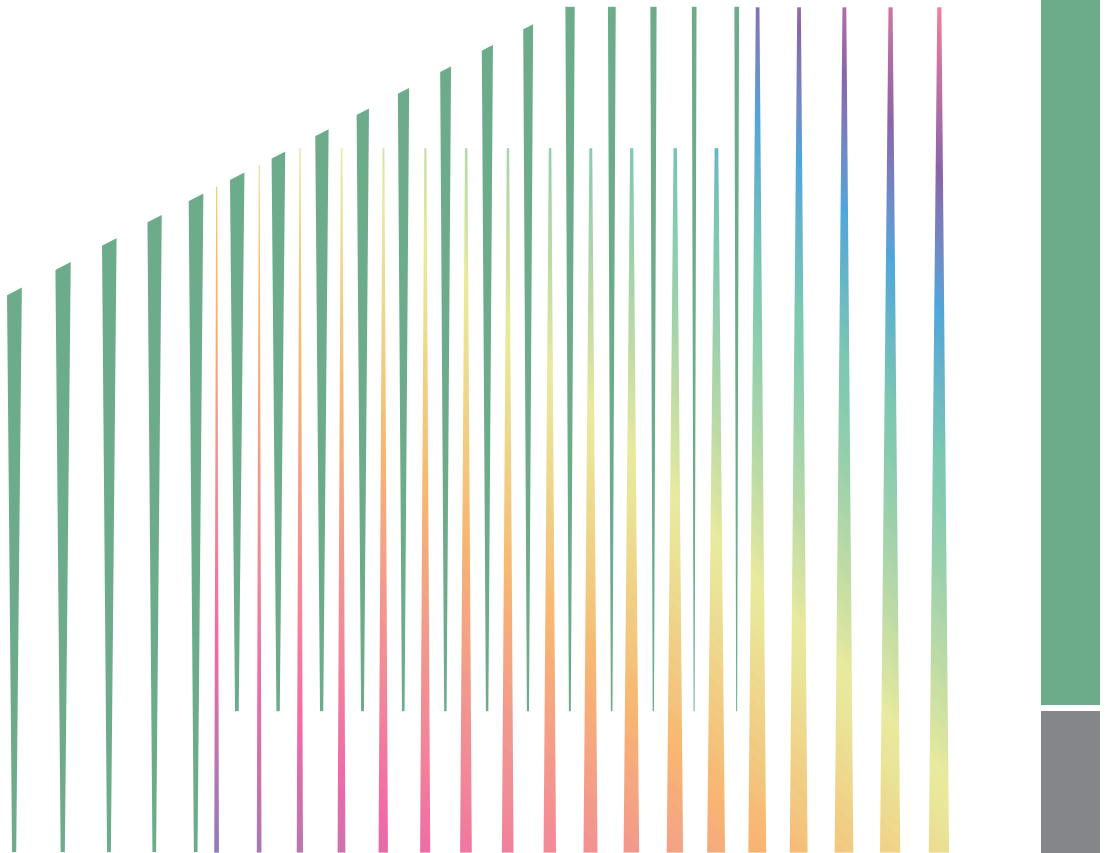


수시연구과제 2021-06

Covid-19 대응 재정정책 설계를 위한 경제현황 기초 분석

- 신용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

김문정·장우현



**Covid-19 대응 재정정책 설계를 위한
경제현황 기초 분석
- 신용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

2021. 10.

김문정 · 장우현

서 언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대책 등과 같은 재정정책을 집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각종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일을 상당히 중요하다. 이 긴급한 시기에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국가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이 설계될 당시에 충분한 데이터가 입수되지 않아 경제주체별 피해 수준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할 경우, 그러한 중요한 정책설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연구진들은 KCB 및 개별 카드회사 정보를 기반으로 2017년 1월~2021년 11월까지의 사업장자료, 2015년 1월~2021년 11월까지의 가구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비효과 및 사업장의 매출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원내의 김문정 부연구위원과 장우현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이 공동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원고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셨던 익명의 평가자,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행 오삼일 차장 등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모든 오류는 저자들의 책임에 있으며,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음을 밝힌다.

2021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그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을 설계할 때에 경제주체의 상황을 파악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입수하고 그러한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하여 경제주체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효율적 재정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였고, 그 효과를 사업장과 가구 측면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장의 경우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의 규모별·업종별·지역별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피해는 기간별·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크게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주요 피해업종과 기타 업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업종의 경우 충분한 피해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 목적인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효과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조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미 있는 정책들이었음을 전제하되, 기존의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2~3차 재난지원금은 규모별로 지원하여 업종이나 지역별 피해를 형평성 있게 다루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완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업장 매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정정책 전반에서의 위상과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긴급재난지원정책들은 전체 재정정책의 일부인 응급정책으로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규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사업체의 영업지표 감소가 코로나19의 피해와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적 메시지를 담은 지역-업종-규모별·등급별 피해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두 번째 분석은 가구의 소비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해당 분석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코로나19 시기의 소비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직접효과를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이 2020년 5월 지급된 것으로 고려하여 5월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구의 소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구원 수별, 유동성제약 수준별 등으로 월별 카드사용액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가지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첫째, 소득수준이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유동성제약 수준이 낮을수록 충격에 대한 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충격으로 카드사용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월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회복될 때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카드사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여력이 큰 집단에서 충격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타난 만큼, 이러한 소비반응을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수준이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가구 소비의 등락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집단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비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도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유동성제약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양(+)과 음(-)의 충격에 대하여 비대칭적인 소비행태를 보인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카드소비액 측면의 부정적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나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카드소비액 측면의 긍정적 효과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이 양(+)과 음(-)의 충격에 대칭적인 소비행태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유동성제약이 높은 집단의 경우 소비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 이러한 소비가 필수적인 소비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취약계층 대상을 정의하는 데 이러한 유동성제약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긴급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긴급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및 정보 파악 및 정책 체계화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향후 재난 발생에 있어 대응하기 위한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었지만 적절히 극복할 경우 정책적 대응체계나 정보체계 구축, 경제의 체질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도 코로나19 이전에는 국책연구원에서 일반적으로 취하지 않았던 접근방식에 따라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도 특히 의미가 있다 하겠다. 비록 부족한 연구이지만 본 연구의 내용이 향후 긴급재난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설계 및 대응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 I. 서론 1
- II. 기존 연구 검토 3
- III. 코로나19 관련 재정투입 현황 6
 - 1.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6
 - 2. 추정된 정책 수혜집단의 특질 분석 11
 - 가. 자료 구축 11
 - 나. 분석 결과 13
- IV. 분석자료 소개 및 기초통계량 20
 - 1. KCB 사업장자료 소개 20
 - 2. KCB 가구자료 소개 22
- V. 신용카드 자료로 분석한 코로나19의 사업체 영향 24
 - 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월별·업종별·규모별·지역별 24
 - 2. 업종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효과 분석: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증감 기준 31
- VI. 코로나19 이후 가구 소비현황 분석 37
 - 1. 개요 37
 - 2.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반응 38
 - 가. 시·군·구별 (재)집계자료 38
 - 나. 법정동별 집계자료 44
 - 3.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질적 소비반응 49

가. 가구소득 분위별	49
나. 평균 가구원 수 분위별	50
다. 유동성제약 수준별	51
Ⅶ. 코로나19 사태 대응 재정정책 함의	53
1. 사업체 지원 관련-긴급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53
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와 유형 및 재정정책에서의 위상 검토	54
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54
다. 긴급재난지원금 피해 규모의 산정 기준: 특성집단별 평균 피해 기준 등급화 ...	55
라. 긴급재난지원금 피해 규모 산정 시의 개별 고려요소: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58
2. 사업체 지원 관련-향후 정책과제	59
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의 명확화와 정책 인프라 구축	60
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실시간 종합정보체계 구축	60
다. 긴급재난지원 재정정책과 정규 재정정책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연계대응 ..	61
라. 규제 당국과 지원 당국의 업무 칸막이 완화	62
3. 가구소비 관련 재정정책 평가 및 정책함의	62
Ⅷ. 결론	65
참고문헌	69
부록	71

표목차

〈표 Ⅲ-1〉 코로나19 대응 수혜계층별 재정지원 현황	7
〈표 Ⅲ-2〉 소득분위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14
〈표 Ⅲ-3〉 시·도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14
〈표 Ⅲ-4〉 가구 규모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15
〈표 Ⅲ-5〉 고등학생 이하 자녀 명수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16
〈표 Ⅲ-6〉 가구의 교육수준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16
〈표 Ⅲ-7〉 가구의 연령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17
〈표 Ⅲ-8〉 가구의 직종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17
〈표 Ⅲ-9〉 가구의 업종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17
〈표 Ⅲ-10〉 가구의 종사상지위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18
〈표 Ⅲ-11〉 가구의 근로시간 유형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19
〈표 V-1〉 대기업 제외 전년 동월 대비 BC카드 지출액 평균매출 변동 업종별 상하위 10개 업종(2020년 9월)	27
〈표 V-2〉 대기업 제외 전년 동월 대비 BC카드 지출액 평균매출 변동 업종별 상하위 10개 업종(2020년 12월)	27
〈표 V-3〉 자영업자 2020년 4~6월 전년 동월 대비 BC카드 매출 변동률 하위 20개 업종	28
〈표 V-4〉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변동률 감소 기준 자영업자 피해 상위 10개 시·군·구	30
〈표 V-5〉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변동률 감소 기준 자영업자 피해 하위 10개 시·군·구	31
〈표 V-6〉 2020년 4월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업종별 이중차분법 추정 ..	33
〈표 V-7〉 고정효과패널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34
〈표 V-8〉 고정효과패널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월별 로그매출액 종속변수	35
〈표 VI-1〉 KCB 소비데이터 분석 로드맵	38
〈표 VII-1〉 규모별·업종별 등급화 방식 예시: 2020년 2월 자영업	57

그림목차

[그림 III-1] 신규 확진자 수와 재정투입 시점	11
[그림 IV-1] 지급수단별 결제건수와 결제금액	23
[그림 V-1] 2020년 1~12월 기업 규모별 전년 대비 매출 증감과 확진자 현황 ..	24
[그림 V-2] BC카드 기업 규모별 월별 매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19 vs 2020)	25
[그림 V-3] 기업 규모별 월별 매출 추이(2017~2020년)	25
[그림 V-4] 2019년 대비 2020년 자영업자 평균매출액 변동률 구간(전국 지도) ..	29
[그림 V-5] 2019년 대비 2020년 자영업자 평균매출액 변동률 구간(서울 지도) ..	30
[그림 VI-1]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구소비 변화: 시·군·구 단위	39
[그림 VI-2] 시·군·구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1~4월, 2019 vs 2020	40
[그림 VI-3] 시·군·구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5~8월, 2019 vs 2020	41
[그림 VI-4] 시·군·구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9~11월, 2019 vs 2020	41
[그림 VI-5] 시·군·구별 과거소득 대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1~4월, 2019 vs 2020	42
[그림 VI-6] 시·군·구별 과거소득 대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5~8월, 2019 vs 2020	43
[그림 VI-7] 시·군·구별 과거소득 대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9~11월, 2019 vs 2020	43
[그림 VI-8]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구소비 변화: 법정동 단위	45
[그림 VI-9] 법정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1~4월, 2019 vs 2020 ..	46
[그림 VI-10] 법정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5~8월, 2019 vs 2020 ..	46
[그림 VI-11] 법정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9~11월, 2019 vs 2020 ..	47

[그림 VI-12] 법정별 과거소득 대비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1~4월, 2019 vs 2020	47
[그림 VI-13] 법정별 과거소득 대비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5~8월, 2019 vs 2020	48
[그림 VI-14] 법정별 과거소득 대비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9~11월, 2019 vs 2020	48
[그림 VI-15] 소득분위별 이질적 소비반응: 전년 동월 대비 카드사용금액 차이 ..	50
[그림 VI-16] 평균적 가구원 수별 이질적 소비반응: 전년 동월 대비 카드사용금액 차이	51
[그림 VI-17] 유동성 제약 수준별 이질적 소비반응: 전년 동월 대비 카드사용금액 차이	52
[그림 VII-1] 소득분위별 가구의 정책수요와 정책공급	63
[그림 VII-2] 지역별 가구의 정책수요와 정책공급	64

I. 서론

2020년 1월부터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전염병과 달리 보건 외에도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크고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 영역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큰 파급력을 보였으며, 특히 대면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타격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이와 같은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전달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먼저 현황 파악에 있어 코로나19의 전파와 그에 따른 영향은 실시간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즉각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산출에 1년 또는 1분기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경제통계들은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경제통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규모가 작고 진출입이 활발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한 통계인데, 코로나19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은 계층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도 중소기업, 고용 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재정정책 전달체계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위한 긴급구제에 적합하도록 구성되거나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달체계만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즉각적 지원이 필요한 주요 피해대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집단이 파악된다고 해도 긴급구제가 필요한 피해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전달하는 데에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도전적 상황에 대한 정책연구 대응의 사례로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특히 사업체 매출정보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의 설계에 참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응에 해당하는 연구인만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용카드 정보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의 자료이거나, 적어도 최선의 자료 중 하나라는 점이다. 먼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용카드 자료는 매출과 소비 중심의 자료이므로, 비용 구조나 소득 등의 자료는 보완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용액에 국한하므로 현금사용액이 누락되는 등 포괄성 측면에서는 완벽하지 않으며, 특히 정책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정보는 예산의 제한이나 개인정보의 문제로 인해 더욱 제약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사태를 맞아 현존하는 자료를 검토했을 때, 실시간 대응을 위해 신용카드 자료를 대체할 자료는 사실상 없었다. 신용카드 자료는 적절히 가공될 경우 적시성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 신용카드 정보는 본질상 원활한 거래를 위해 구성되고 집적된 것이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설계나 집행 목적을 위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이를 위한 정책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목적성을 가지고 정리하고 분석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있어 연구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된 자료가 신용카드 자료였지만, 2021년 8월 현재 실제로 2020년 전반에 대한 분석 예시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수와 분석 결과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신용카드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루어진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 이해 및 필요한 자료의 추출 과정을 시급성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노력은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제III장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정투입 현황을 설명한다. 제IV장에서는 분석자료와 기초통계량을 설명한다. 제V장과 제VI장에서는 각각 사업장 매출자료와 가구 소비 자료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전후의 충격변화를 분석한다. 제VII장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의 재정정책 대응의 함의를 도출한다.¹⁾

1) 본 연구 내용의 일부는 장우현,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지원」, 『재정포럼』, 2021년 4월호, 통권 제298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 26~52로 발표된 바 있음.

II. 기존 연구 검토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경제상황을 사업체의 매출과 가구의 소비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참고문헌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라는 경제 충격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오삼일·이상아(2021)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추정하기보다는 ‘봉쇄 조치 시 근무가능지수(lockdown working ability)’를 측정하여 잠재적 임금 및 소득분배 영향을 예상한 것이다. 저자들은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임금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1분위에서 그 감소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결과 임금은 전반적으로 7.4%가량 감소하되, 지니계수는 증가하여 소득분배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관한 관련된 연구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논의는 그 피해계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낳았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현재도 수행 중이다. 김미루·오윤해(2020)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저자들은 가계소비가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었고 관련한 한계소비성향이 26.2~36.1%라고 보고했다. 홍민기(2020)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16.3% 감소,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7.3% 증가, 5월 중순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70%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특히 지급 초기에 소비창출효과가 두드러졌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우진 외(2021)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한계소비성향이 65.5%로 나타나 홍민기(2020)와 유사한 값을 보고하였다. 몇몇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남재현·이래혁(2021)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소비효과를 분석하되, 분위별 소비 수준을 분석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가구소비 진작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기여하였다고 결론을 내린다. 한편 노대명(2020)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다소 다르지만, 소비에 대한 연구로 전승표 외(2021)를 고려할 수도 있다. 저자들은 소비와 더불어 검색활동에 관한 데이터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수준을 보여주고자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가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계층에 대하여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된 바 있다. 여유진·김성아(2020)는 코로나19에 대하여 긴급지원의 유형 및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셋째,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연구로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연구를 검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김미루·오윤해(2020), 홍민기(2020) 등도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이성호·최석환(2020)은 수원시 소재 BC카드 가맹점의 거래승인 월별 자료로부터 도출된 행정동 및 집계구 단위의 두 가지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시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신용카드 데이터의 경우, 높은 구독 비용으로 인하여 학술연구보다는 정책적·영리적 목적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주로 활용되는 경향을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정구역별 영향, 가맹점 특성별(업종, 매출규모), 사용자 특성(연령, 거주지역, 사용시간대)별로 보이는 이질적인 충격의 양상을 정리하였다. 김경근·염명배(2015)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민간소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신용카드 사용액 통계가 민간 소매판매의 대리변수로 사용되고 경기판단을 위한 보조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는 등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김경근·염명배(2017)에서는 소비 대리변수로서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업종별 역외소비율, 소비유입률 등의 지수를 산출하고, 역외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고용에의 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역외소비의 과도한 증가는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연구와 궤를 같이 한다. 작년 상반기 이후에 취해졌던 많은 정책(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방정부의 개별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효과가 코로나19의

경제효과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정 정책의 효과를 식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식별하기보다는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입수된 신용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매출 및 가구소비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소비나 매출감소 계층을 파악함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Ⅲ. 코로나19 관련 재정투입 현황

1.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유형의 재정투입이 이루어져 왔다. <표 Ⅲ-1>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리한 코로나 대응 수혜계층별 재정지원 현황을 보여준다.

<표 Ⅲ-1>에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2020년도 제2차 추경 건은 표시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21년 3월의 추경 건까지 합하여 총 여섯 차례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을 펼친 셈이다. 수혜인원과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제1차 추경을 통해 1,100만명 이상의 수혜인원을 대상으로 11.7조원이 지원되었다. 2020년 4월 30일에 국회 확정된 제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대상(2,171만가구)으로 12.2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다. 2020년 7월에는 제3차 추경을 통해 930만명을 지원하고자 35.1조원이 투입되었다. 이후 제4차 추경(9월 22일) 및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12월 29일)에서 각각 7.8조원과 9.3조원 규모의 지원금이 집행되었다. 2021년에는 19.4조원 규모로 820만명을 지원한 바 있다.

〈표 III-1〉 코로나19 대응 수혜계층별 재정지원 현황

구분	1	2	3	4	5
지원시기	2020년 제1차 추경 (2020. 3. 17.)	제3차 추경 (2020. 7. 3.)	제4차 추경 (2020. 9. 22.)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0. 12. 29.)	2021년 추경 (맞춤형 피해대책 포함) (2021. 3. 25.)
지원규모	11.7조원 (지출 +10.9조원, 세입경정 △0.8조원)	35.1조원 (지출 +23.7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7.8조원	9.3조원 (예비비 4.8조원, 기금변경 등 4.5조원)	19.4조원 (추경 14.9조원, 기정 예산활용 4.5조원)
지원인원	1,100만명+α	930만명+α	1,330만명	580만명	820만명
소상공인	직접 지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0.4조원, 94만명) (예비비 등 포함 1.4조원)	새희망자금 (3.3조원, 250만명)	버팀목자금 (4.1조원, 280만명)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조원, 385만명)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0.6조원)
	금융 및 회복 지원	금융지원 (3.1조원) 고용유지지원 등 (0.6조원, 65만명) 재기지원· 온누리상품권 등 (0.4조원, 20만명)	금융지원 (0.6조원, 101만명)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2.4조원)	금융지원 (0.5조원, 66만명) 폐업점포 채도전장려금 (0.1조원, 20만명)	임차료용자 (1.0조원) 재기지원· 긴급유동성공급 (1.0조원, 26만명)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29만명)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2조원, 51만명) (예비비 등 포함 0.7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61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조원, 6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5조원, 80만명)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기사 (0.08조원, 8만명)	법인택시기사 (0.04조원, 7.8만명)	법인택시기사 (0.06조원, 8만명) 전세버스기사 (0.02조원, 3.5만명)
	필수 노동자			방문돌봄종사자 (0.05조원, 9만명)	마스크 지원 (0.04조원, 103만명) 방문돌봄종사자 (0.03조원, 6만명)

〈표 III-1〉의 계속

구분	1	2	3	4	5
농어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0.4조원, 중복)			농어민 바우처 등 (0.2조원, 50만명)
생계위기가구	저소득층 소비쿠폰 (1.0조원, 169만가구) 긴급복지, 건보료 경감 등 (0.8조원, 575만명)	긴급복지 (0.05조원, 3.0만가구) 주거안정지원, 소액금융 등 (0.8조원, 11만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조원, 55만가구(88만명))	저소득층 긴급복지 (0.1조원, 6만가구)	한계근로비고충 한시생계지원 (0.4조원, 80만가구) 노점상 지원 (0.02조원, 4만명) 근로장학금 (0.03조원, 1만명) 긴급복지·생활안정 (0.2조원, 8만가구)
양육가구	특별돌봄쿠폰 (1.1조원, 263만명) 양육부담 경감 (0.05조원, 15만명)		아동특별돌봄 (1.1조원, 532만명) 비대면학습지원, 돌봄휴가 등 (0.3조원, 138만명)	가족친화제도, 아이돌봄 등 (0.2조원, 51만명)	가족돌봄휴가·아이돌봄 등 (0.15조원, 19만명) 장애인 원격수업·긴급돌봄 (0.02조원, 2만명)
고용지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0.6조원, 17만명)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등 (8.5조원, 207만명)	고용유지, 청년 구직 지원 등 (0.8조원, 50만명)	고용유지, 직업훈련 지원 등 (1.6조원, 102만명)	고용유지,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등 (2.3조원, 60만명) 고용연계용자 (1.8조원, 13.7만명)
방역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2.1조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K방역 (1.0조원, 456만명)	백신구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0.2조원, 105만명)	공공의료 강화, 손실보상 등 (0.8조원)	백신구매·접종 (2.7조원) 방역대응손실보상 등 (1.5조원)
기타	지역경제 회복지원 (1.2조원) 세입경정(0.8조원)	한국판뉴딜 (4.8조원(1.7조원, 중복)) 주력산업 금융지원 등 (6.6조원) 세입경정(11.4조원)	이동통신요금지원 (0.4조원) 목적예비비(0.05조원)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1.1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보도참고자료, 2021. 4. 1.

2020년 제2차 추경을 통해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계층별로 맞춤형 지원방식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력 수혜계층은 크게 다섯 유형으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필수노동자), 농어민, 생계 위기가구, 양육가구 등이다.

수혜대상이 되는 경제주체별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주에 대한 지원, 개인·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융지원, 고용비용보조(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재정지원이 주를 이룬다.

최근의 추경에는 맞춤형 지원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의 지원대상이었던 계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지원계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는 경우 적지 않은 행정비용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것은 지난 1년간의 재정정책 집행으로부터 구축된 취약계층 DB 등이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아동돌봄쿠폰과 같이 일단 수혜대상을 파악한 경우, 이후 유사한 재정지원을 할 때는 추가적인 행정비용 없이 곧바로 재정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의 재정정책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은 단연코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이는 모든 계층에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었는데, 모든 계층이 그 수혜대상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무척 높았다. 초반 기획재정부에 의한 제2차 추경 정부안에서는 상위 30% 소득가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간의 논의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선별지급을 하는 경우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정책수요가 높은 이들에게 정부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러한 재정지원의 수급조건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행정비용과 시간의 기회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힐 수 있다. 보편지급의 경우 행정비용과 시간의 기회비용은 낮지만, 사중손실 등 의도하지 않은 후생의 손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하는 점은 비단 경제적 손익을 제대로 측정한다고 해도 그 두 가지 지급형태의 우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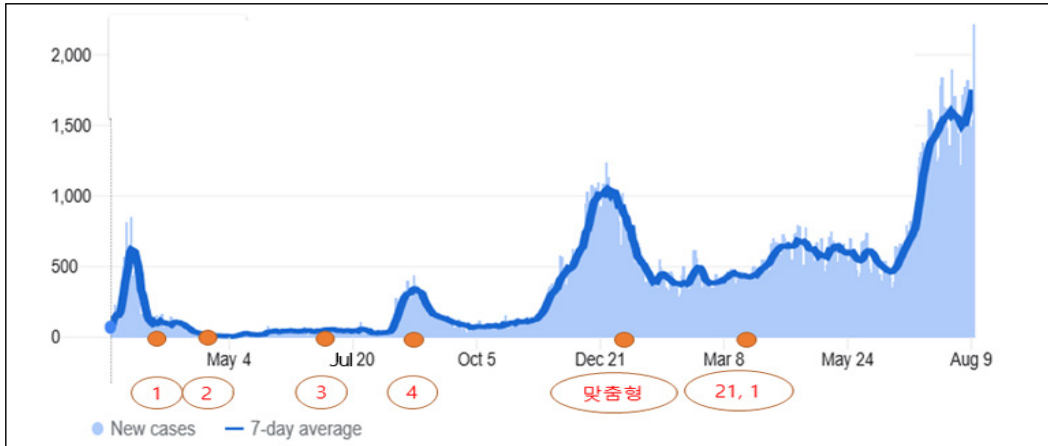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선별지급을 할 때 행정비용이나 시간의 기회비용이 상당히 낮을지라도 보편지급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보편지급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투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자 [그림 III-1]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차 추경이 이루어진 시점은 2020년 3월 17일로, 이때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처음으로 심각하게 발생했다가 크게 감소한 시점이다. 유사한 시기에 제2차 추경이 이루어졌다. 선별지원이 주를 이루는 제3차 추경과 함께, 제1차 및 제2차 추경 모두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에 추진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경제계층에 대한 사후적 보상의 일환으로 추경예산이 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간헐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제4차 추경은 확진자 수가 대구 신천지 건 이후로 가장 크게 증가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2020년 12월에 이루어진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나 2021년 3월 추경의 경우도 확진자가 줄어들거나 0으로 수렴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 국회 확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이 모두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제계층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재정정책이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1] 신규 확진자 수와 재정투입 시점

(단위: 명)



자료: CSSEGISandData, "JHU CSSE Covid 19 Raw Data"(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검색일자: 2021. 4. 30.)
 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2. 추정된 정책 수혜집단의 특질 분석

가. 자료 구축

앞서 살펴본 재정정책을 투입했을 때, 어떤 특질을 갖고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을 많이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을 가장 크게 입은 집단이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도록 정부지원금이 설계되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집단별 추정은 이후의 장(chapter)에서 분석하고, 여기에서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재정집행의 성격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장 최근의 공개자료인 22차년도 자료(2018년 귀속소득)를 활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도 분석자료로서 검토하였으나, 정부지원이 취약계층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조사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판별할 수 있는 변수가 충분하지 않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게 되었다.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은 <표 III-1>에 제시된 정책 중에서 고용유지나 고용창출을 위해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과 정책금융지원, 방역지원, 그리고 기타지원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구체적으로 본 절에서 검토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20년 제1차 추경의 경우 저소득층소비쿠폰, 긴급복지·건보료경감, 특별돌봄쿠폰, 양육부담 경감 지원을, 제2차 추경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제3차 추경의 경우 소상공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복지, 주거안정지원을 고려하였다. 제4차 추경의 경우 새희망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관련 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특별돌봄쿠폰, 비대면학습지원·돌봄휴가 등을 검토하였고, 2020년 12월 맞춤형 지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관련 지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가족친화제도·아이돌봄 등을 검토하였다. 2021년 제1차 추경에서는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방문돌봄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한시 생계지원, 긴급복지·생활안정, 가족돌봄휴가아이돌봄 지원 등을 고려하였다.

매출이나 소득의 변화, 업종의 세분류, 특고·프리랜서 여부, 긴급복지 대상 여부, 전세버스기사 여부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계산을 단순화하는 여러 가정을 적용하였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대상 여부는 하위 15% 소득분위 가구들이 기본적인 적용대상이라고 가정하였다. 비대면학습지원, 돌봄휴가 등은 아동수당 대상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는 구분이 어려워 운전원이라는 직종을 갖고 있는 경우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소상공인 여부는 기존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의된 소상공인 정의에 부합하면서 종사자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판단하였다. 특고·프리랜서 여부는 자영업자이면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이 경우 임금근로자로 자신을 잘못 분류한 특고·프리랜서를 제외하여 특고·프리랜서 규모를 과소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가구나 개인별 특질을 이용하여 각 지원금의 수급확률 및 수급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표 III-1>에서 제시되어 있는 실제 지원대상 인원과 총지원금액을 이용하여 1인당 지원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평균적인 지원금액이 '수급액'으로 정의된다. 수혜확률은 「한국노동패널조사」로 추정된 지급대상 중에서 실제 지급인원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 비율을 임계치로 삼아 개별적인 균일분포확률에 따라 해당 지원의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계층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집단과 차상위 집단을 합친 개념인데, 「한국노동패널조사」(가중치 비적용)에서는 이러한 집단의 비중이 49.17%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수를 5,100만명이라 가정하면, 2,508만명이 잠재적인 수혜대상이 된다. 2020년 제1차 추정 때 주어진 저소득소비쿠폰의 실제 수혜자는 169만명이었으므로, 수혜확률은 20.02%로 계산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관측되는 응답자가 만약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응답자의 균일분포확률변수가 0.2002를 넘지 않으면 저소득소비쿠폰을 수혜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저소득소비쿠폰의 금액은 관련된 총지원금액이 1조원이고, 총지원대상은 169만명이었으므로 20만원으로 상정하였다. 만약에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정의한 집단의 정의가 협소하여 실제 지원대상보다 적을 경우,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정의한 집단 모두가 해당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가 받게 되는 코로나19 재정지원의 경우, 과거 지급사례를 고려하여 92%만이 신청하여 해당 지원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와 개인별 지원이 서로 다르게 처리됨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영업자나 특고·프리랜서 지원은 가구지원이 아닌 개별지원인 데 반하여, 저소득소비쿠폰이나 돌봄쿠폰 등은 가구단위 지원이다. 최종적인 분석을 가구단위로 수행하기 위해 가구 내 각 가구원들이 수혜받은 개인별 지원은 합산하여 추가적인 가구단위 지원으로 간주하였다. 결과적으로 가구별 정책지원 총액은 가구단위의 지원과 가구원들이 수급한 개별단위 지원의 합계액으로 계산된다. 어떤 가구에 자녀가 존재할 경우, 한 가구 내 자영업자나 특고자가 많은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 분석 결과

가구 및 가구의 특질별로 지원금액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기초통계량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볼 때, 2~4분위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8분위 이상의 경우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위 소득분위 가구의 경우 유자녀 가구일 가능성이 높아 돌봄과 관련된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2〉 소득분위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단위: 만원)

소득분위	평균	표준편차
1	100.42	110.17
2	93.22	103.75
3	85.84	68.11
4	93.99	71.78
5	110.49	77.12
6	121.49	77.41
7	134.38	80.39
8	141.80	90.12
9	140.98	82.90
10	147.09	87.56

주: 소득분위는 smart-klips에서 제공되는 분위를 활용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차 조사자료), 2019.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II-3〉에서는 시도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세종시, 제주도, 울산광역시에 특히 재정지원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시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I-3〉 시·도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단위: 만원)

구분	시도	평균	표준편차
1	서울특별시	105.43	75.66
2	부산광역시	109.44	92.64
3	대구광역시	114.43	93.13
4	대전광역시	107.72	81.00
5	인천광역시	116.99	81.00
6	광주광역시	117.64	94.75
7	울산광역시	129.70	86.50
8	경기도	118.42	82.46
9	강원도	122.97	92.09
10	충청북도	110.43	87.91

〈표 Ⅲ-3〉의 계속

구분	시도	평균	표준편차
11	충청남도	120.17	82.06
12	전라북도	118.62	93.46
13	전라남도	122.85	90.37
14	경상북도	119.38	85.65
15	경상남도	119.25	91.61
16	제주도	134.71	87.08
19	세종특별자치시	134.62	94.9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차 조사자료), 2019. 기반으로 저자 작성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5인까지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재정지원이 커지는 것을 보이고, 5인에서 6인으로 증가할 때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유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특히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자녀가구 중에서도 특히 미취학 아동 등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집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데, 〈표 Ⅲ-5〉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와 달리 〈표 Ⅲ-5〉에서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 명수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는 자녀 수에 따라 재정지원이 단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 가구 규모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단위: 만원)

가구원 수	평균	표준편차
1	69.70	79.60
2	97.21	74.08
3	134.45	76.62
4	160.72	78.15
5	167.41	82.25
6	161.97	78.88

주: 6인 가구까지만 제시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차 조사자료), 2019.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Ⅲ-5〉 고등학생 이하 자녀 명수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단위: 만원)

자녀 명수	평균	표준편차
0	97.54	82.67
1	148.15	72.75
2	170.27	72.71
3	177.41	71.61
4	192.24	82.37

주: 4명 자녀 가구까지만 제시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차 조사자료), 2019.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Ⅲ-6〉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단위: 만원)

가구주 교육수준	평균	표준편차
무학	91.19	98.00
고졸 미만	99.91	81.04
고졸	118.84	88.62
전문대졸	128.71	81.62
대졸 이상	127.29	80.06

주: 4명 자녀 가구까지만 제시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차 조사자료), 2019.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Ⅲ-6〉에서는 가구주 교육수준별 코로나19의 재정지원 규모를 보여준다. 고졸 미만 가구주는 고졸 이상 가구주에 비하여 재정지원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7〉의 경우 그 지원이 40~50대에 가장 높고 그 이후로 줄어들며, 20~30대의 경우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재정지원과 유자녀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7〉 가구주의 연령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20대	46.67	11.55
30대	66.37	49.86
40대	135.04	79.47
50대	139.34	84.41
60대	123.36	83.40
70대	109.77	87.51
80대	97.19	85.79

주: 20~89세까지만 제시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차 조사자료), 2019.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II-8〉 가구주의 직종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관리자	139.15	92.9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7.81	80.66
사무종사자	116.29	67.70
서비스종사자	123.11	94.51
판매종사자	161.97	103.1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74.35	93.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0.19	84.7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0.52	88.22
단순노무종사자	96.10	81.72

주: 20~89세까지만 제시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차 조사자료), 2019.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II-9〉 가구주의 업종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단위: 만원)

업종	평균	표준편차
A. 농,임,어업	171.68	96.71
B. 광업	121.67	71.02
C. 제조업	124.57	75.13

〈표 III-9〉의 계속

업종	평균	표준편차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26.79	65.66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05.86	52.07
F. 건설업	123.69	82.83
G. 도매 및 소매업	155.68	102.18
H. 운수 및 창고업	151.83	96.26
I. 숙박 및 음식점업	130.90	97.76
J. 정보통신업	116.53	70.74
K. 금융 및 보험업	129.87	82.25
L. 부동산업	106.69	83.0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9.49	84.32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6.39	78.81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107.37	67.97
P. 교육서비스업	111.97	73.11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73	68.9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3.38	86.54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4.51	99.63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활동	62.07	20.4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차 조사자료), 2019.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II-10〉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단위: 만원)

종사상지위	평균	표준편차
비경제활동인구	87.08	70.82
1. 상용직	108.63	59.99
2. 임시직	78.68	58.19
3. 일용직	85.29	64.36
4. 고용주/자영업자	199.12	103.05
5. 무급가족종사자	159.00	90.1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차 조사자료), 2019.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Ⅲ-11〉 가구주의 근로시간 유형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단위: 만원)

근로시간 유형(주당)	평균	표준편차
15시간 미만	87.94	83.47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123.00	95.47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33.84	91.72
40시간	123.82	78.85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131.07	87.96
52시간 초과	156.00	99.7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차 조사자료), 2019.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Ⅲ-8〉~〈표 Ⅲ-11〉에서는 가구주의 직종, 업종,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유형별로 코로나19의 재정지원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직종이나 업종의 경우 농림어업 관련 직종 및 업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가구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사상지위의 경우, 고용주나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가구주의 가구에 재정지원이 많았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중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이 주요 지원금이었던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근로시간 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많은 가구주에 대한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를 하거나 자녀가 존재하는 가구의 가구주의 경우 전일제 40시간 혹은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IV. 분석자료 소개 및 기초통계량

1. KCB 사업장자료 소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사업체와 가구 정보를 기반으로 개별 카드회사인 BC카드와 하나카드의 가맹점 및 사용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병합한 자료이다.

참고로 본 연구와 관련한 연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는 크게 사업장 매출자료와 가구 소비자자료로 나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장자료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월간자료이며, 지역과 업종에 따라 관측치가 구성된다. 지역은 법정동 기준, 업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10차 표준산업분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자료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135개 업종분류를 활용하였다. 데이터의 익명성 유지를 위해 사용한 기준은 5개 이상의 자료 평균으로, 4개 이하의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종을 소분류 등 상위 기준으로 높여 5개 이상으로 만들어 평균 수치를 집계하였다.

사업장자료에 있어서 연구 설계상 자료 구성에 있어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은 규모의 구분이다. KCB가 제공한 자영업자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를 식별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한국기업데이터(KED)」 자료(2020)를 활용하여 KED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속한 사업체 또는 2010~2018년 중 한 번이라도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에 속한 사업체는 대기업·중견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자료와 자영업자 자료, 대기업·중견기업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장자료는 자영업자, 대기업·중견기업, 전체에서 두 수치를 제외한 중간 규모 기업으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KCB는 카드매출 전부와 현금매출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해당 정보는 연간자료이므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월간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추정치 도출에 있어 코로나19

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월간자료로는 BC카드와 하나카드 가맹점들의 매출액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구축한 자료가 개별 사업체 기준이 아니고 법정동-월-업종에 따른 구분이라면 지나치게 간략화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관측치는 1,174만 2,751개에 달한다.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충분한 경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축한 자료 중 가구자료는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가구자료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법정동과 월간 기준으로 구성하며, 거주지 주소 기준으로 추정된 세대 기준으로 가구별 자료를 구성한다. 관측치는 법정동과 업종 단위로 구성된다.

요컨대 이후 제 V장에서 활용한 신용카드 사업장자료는 BC카드와 하나카드²⁾ 가맹점 정보를 기반으로 규모별·업종별·지역별로 월별 패널자료를 구축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모는 자영업자, 대기업·중견기업, 그 외의 중간 규모 기업 사업체로 분류되며, 업종은 기본적으로 제10차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분류되고 지역은 법정동을 최소 단위로 시·군·구, 시·도 기준으로 묶어 분석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용카드 자료는 자료 체계를 구축할 경우 2020년 12월 자료가 2021년 1월 중순까지 확보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적시성을 가지지만, 다양한 한계도 존재한다.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외에 현재 구축된 신용카드 자료에서는 BC카드 자료가 전체 카드사용액을 잘 대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월간자료로서 주간이나 일간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더 짧은 기간의 효과를 분석하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전제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종 통계수치의 도출 방법이나 효과추정방법은 데이터를 보강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론 측면에서의 한계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용

2)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점유율 2위인 BC카드의 분석만을 예시로 제시한다. 참고로 정확한 월별 점유율은 카드사가 공개를 꺼리는 민감 정보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KCB는 대략적인 BC카드 점유율을 24%, 하나카드 점유율은 7%로 제시하고 있다.

카드 자료는 예산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다른 카드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관측 기간도 월에서 주, 일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은 향후 극복 가능한 문제임도 함께 서술해 두고자 한다.

2. KCB 가구자료 소개

본고에서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부터 구매한 「KCB 가구자료」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카드사용금액, 대출금액, 연체금액, 추정월소득 등의 변수를 포함한 자료이다. 카드사용, 대출, 연체 등의 정보는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³⁾ 이러한 자료는 「KCB 가구자료」라고 명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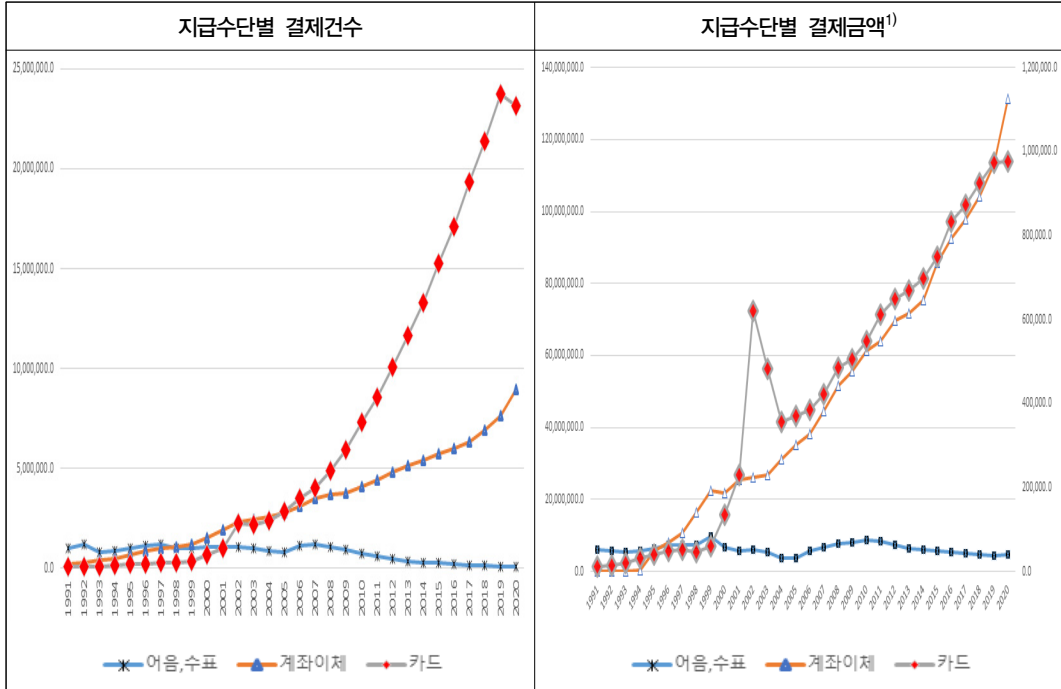
「KCB 가구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비 변화를 분석할 때, 장단점이나 몇 가지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먼저 한계점으로 매출전표 단위의 정보는 KCB가 각 카드회사로부터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사용금액이나 카드로 거래된 업종분야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KCB 자료의 제공 주기가 1개월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코로나19의 충격 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별 카드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비하여 KCB 소비데이터는 전체 카드소비액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체 소비수준의 변동성을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카드소지자의 '신용 상태'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KCB 가구자료」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거의 전수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구의 '소비' 변화를 포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현금결제나 계좌이체, 수표, 어음 등의 다른 결제수단으로 인한 거래를 포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결제건수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바 있다. [그림 IV-3]의 왼쪽 그림은 결제건수를, 오른쪽 그림은 결제금액을 보여준다. 신용카드의 결제건수는 200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결제금액은 2003~2005년 기간 크게 늘어났다 갑자기 감소하긴 하였으나, 그 이후 크게 증가했다.

3) 2021년 1월 초에 데이터를 입수받으려고 시도한 과정에서 2020년 12월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

[그림 IV-1] 지급수단별 결제건수와 결제금액

(단위: 천건, 십억원)



주: 1) 이 그림에서 신용카드 금액은 보조축에 제시되어 있음

자료: KOSIS, 「지급수단별 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043Y051&conn_path=3, 검색일자: 2021. 10. 12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원자료: 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 <https://www.bok.or.kr/portal/tbs/P0000108/list.do?menuNo=200355>, 검색일자: 2021. 10. 12.

[그림 IV-1]을 기반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카드 데이터가 가구의 소비 변화를 포착하는 데 적절하다는 것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2020년 기간에 카드로 인한 결제건수가 급작스럽게 감소하고, 결제금액의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되었다는 점에서 카드 DB가 소비충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지급수단별 결제금액이 계좌이체나 수표, 어음 등에 비하여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카드가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신용카드 자료로 분석한 코로나19의 사업체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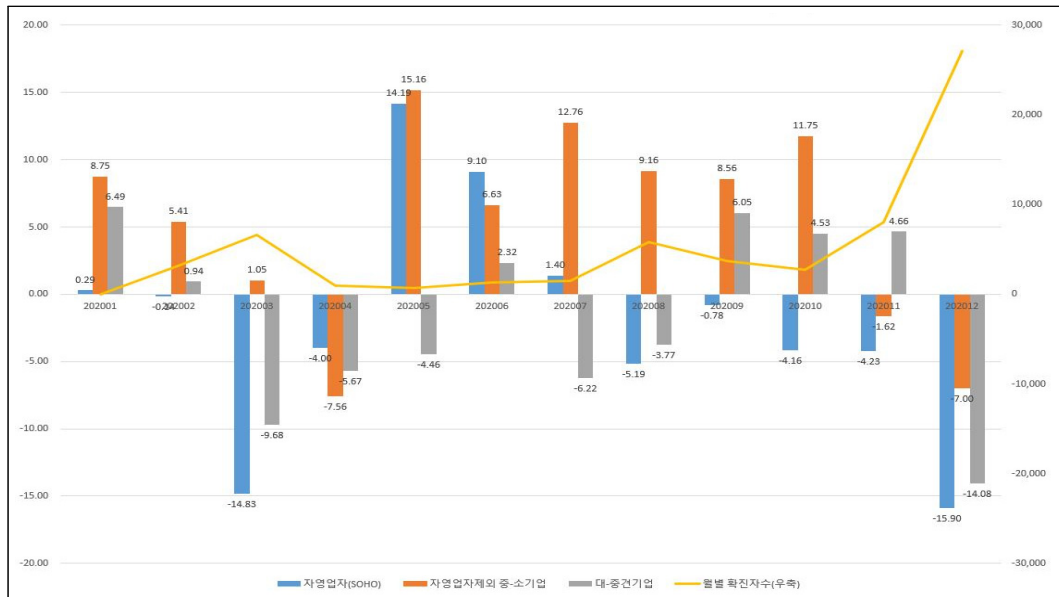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제IV장에서 소개한 자료를 기반으로 월별·업종별·지역별·규모별로 코로나19가 신용카드 매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제시하고, 피해여부에 따른 5월 이후의 정책대응 효과의 업종별 차이를 분석한다.

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월별·업종별·규모별·지역별

먼저 기업규모별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업규모별 월별 매출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확인한바, 2020년 3월과 2020년 12월에 자영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큰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V-1] 2020년 1~12월 기업 규모별 전년 대비 매출 증감과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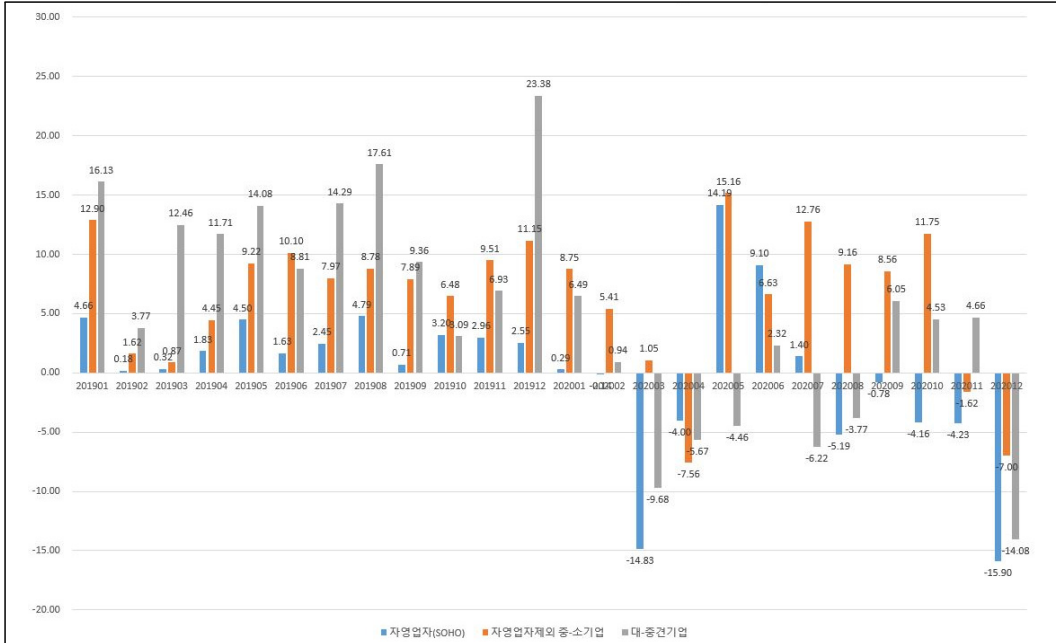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 WHO(202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2] BC카드 기업 규모별 월별 매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2019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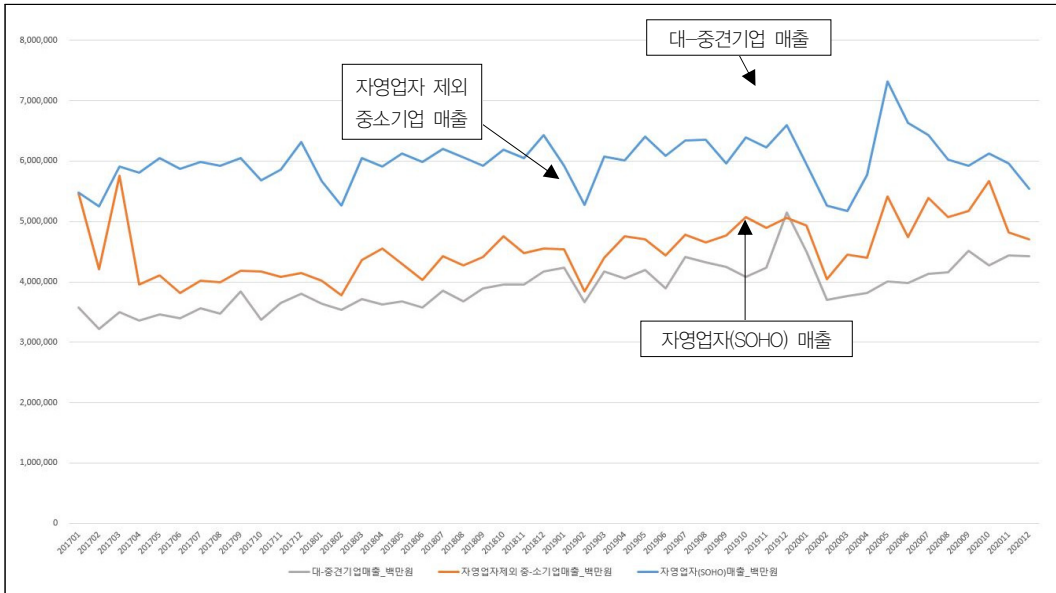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 WHO(202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3] 기업 규모별 월별 매출 추이(2017~2020년)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 WHO(202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1]에서 꺾은선 그래프는 월별 확진자 수이며 우측이 기준축이 되고 막대 그래프는 전년 동월 규모별 매출액 증감률을 나타낸다. [그림 V-2]는 구축한 자료에서 2017년부터의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8년과 2019년의 차이를 추가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3월의 충격은 4월 확진자 감소를 통해 회복세를 보인다는 사실과 기업 규모별로 자영업과 대규모 기업을 제외한 중간 규모 기업들은 2020년 연간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3]은 기업 규모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월별 매출 추이를 나타낸 자료이다. BC카드 매출액 자료에서 월별 자영업 매출액은 대략 6조원 대, 중간 규모 매출액은 대략 5조원, 대기업 매출액은 대략 5조원 규모로 파악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로 피해 규모가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는 중간 규모 기업과 자영업자, 즉 대기업·중견기업 규모를 제외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통신판매업, 골프장, 육류소매업 등은 강세이나 면세점, 백화점, 항공운송업 등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 대기업 제외 전년 동월 대비 BC카드 지출액 평균매출 변동 업종별 상위 10개 업종(2020년 9월)
(단위: 원)

매출액 변동 상위 업종명	평균매출 변동	매출액 변동 하위 업종명	평균매출 변동
통신 판매업	66,685,95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458,239
기타 보건업	8,508,822	공연시설 운영업	-3,352,362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943,944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3,737,815
대형마트	6,758,677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6,114,559
방문 교육학원	5,260,182	수상 운송업	-6,912,294
슈퍼마켓	4,731,554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12,459,82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4,427,159	협회 및 단체	-21,663,757
금융업	2,155,511	백화점	-61,295,612
육류 소매업	2,090,032	항공 운송업	-110,500,000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	1,609,480	면세점	-766,900,000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표 V-2〉 대기업 제외 전년 동월 대비 BC카드 지출액 평균매출 변동 업종별 상위 10개 업종(2020년 12월)
(단위: 원)

매출액 변동 상위 업종명	평균매출 변동	매출액 변동 하위 업종명	평균매출 변동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8,963,481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6,509,587
방문 교육학원	6,473,63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7,036,609
슈퍼마켓	4,296,251	대형 마트	-7,135,70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219,084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0,145,354
육류 소매업	1,309,513	협회 및 단체	-12,909,211
방송업	1,121,958	자동차 신품 판매업	-16,288,630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	780,118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19,048,975
체인화 편의점	370,046	항공 운송업	-112,200,000
자동차 및 모터 사이클 수리업	345,137	백화점	-170,600,000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337,954	면세점	-1,117,000,000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업종별 피해의 지속성이다. 경제 전체는 물론, 규모를 자영업자에 한정해서 전 국민 일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월 이후 6월의 통계를 보아도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전체 경기에는 도움이 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제Ⅶ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의 주된 정책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업종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맞춤형으로 증가시키지는 못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300개 이상의 자영업자 가맹점이 확인되는 업종 중, 2020년 4월 기준 매출 변동률 하위 20개 업종 중 18개 업종이 2020년 5월이나 6월의 매출 변동률 하위 20개 업종에 역시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3> 자영업자 2020년 4~6월 전년 동월 대비 BC카드 매출 변동률 하위 20개 업종

(단위: %)

2020년 4월 주요 피해업종	변동률	2020년 5월 주요 피해업종	변동률	2020년 6월 주요 피해업종	변동률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3.34	예술학원	3.21	전문서비스업	3.31
섬유외복신발및가족제품 소매업	-13.42	시계및귀금속소매업	1.17	한식음식점업	0.20
그외기타교육기관	-17.10	그외기타종합소매업	-0.35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2.67
운송장비용연료소매업	-18.92	도로화물운송업	-0.82	방문교육학원	-3.48
시계및귀금속소매업	-20.07	방문교육학원	-3.59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 출판업	-4.96
육탕마사지및기타신체관리 서비스업	-20.96	부동산업	-4.22	화장품비누및방향제소매업	-5.85
전문서비스업	-22.7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6.81	육상여객운송업	-6.88
방문교육학원	-24.57	오락장운영업	-12.57	부동산업	-7.80
주점및비알코올음료점업	-24.58	육상여객운송업	-14.65	시계및귀금속소매업	-7.92
오락장운영업	-24.60	예술품기념품및장식용품 소매업	-19.68	육탕마사지및기타신체 관리서비스업	-12.24
화장품비누및방향제소매업	-25.10	중고자동차판매업	-20.94	운송장비용연료소매업	-14.81
육상여객운송업	-26.79	운송장비용연료소매업	-21.24	기관구내식당업	-16.00
부동산업	-26.90	전문서비스업	-21.53	예술품기념품및장식용품소매업	-16.12
기관구내식당업	-31.42	운송장비임대업	-23.65	운송장비임대업	-19.71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 출판업	-31.51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24.68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20.45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31.76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 출판업	-25.95	주점및비알코올음료점업	-21.97
예술품기념품및장식용품 소매업	-38.59	주점및비알코올음료점업	-26.25	오락장운영업	-25.48
예술학원	-40.46	기관구내식당업	-30.87	공연시설운영업	-56.58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70.53	공연시설운영업	-62.07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65.80
공연시설운영업	-71.82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76.34	자동차신품판매업	-80.00

주: 1. 2020년 4월 주요 피해업종 중 5월이나 6월에도 주요 피해업종으로 확인되는 경우 음영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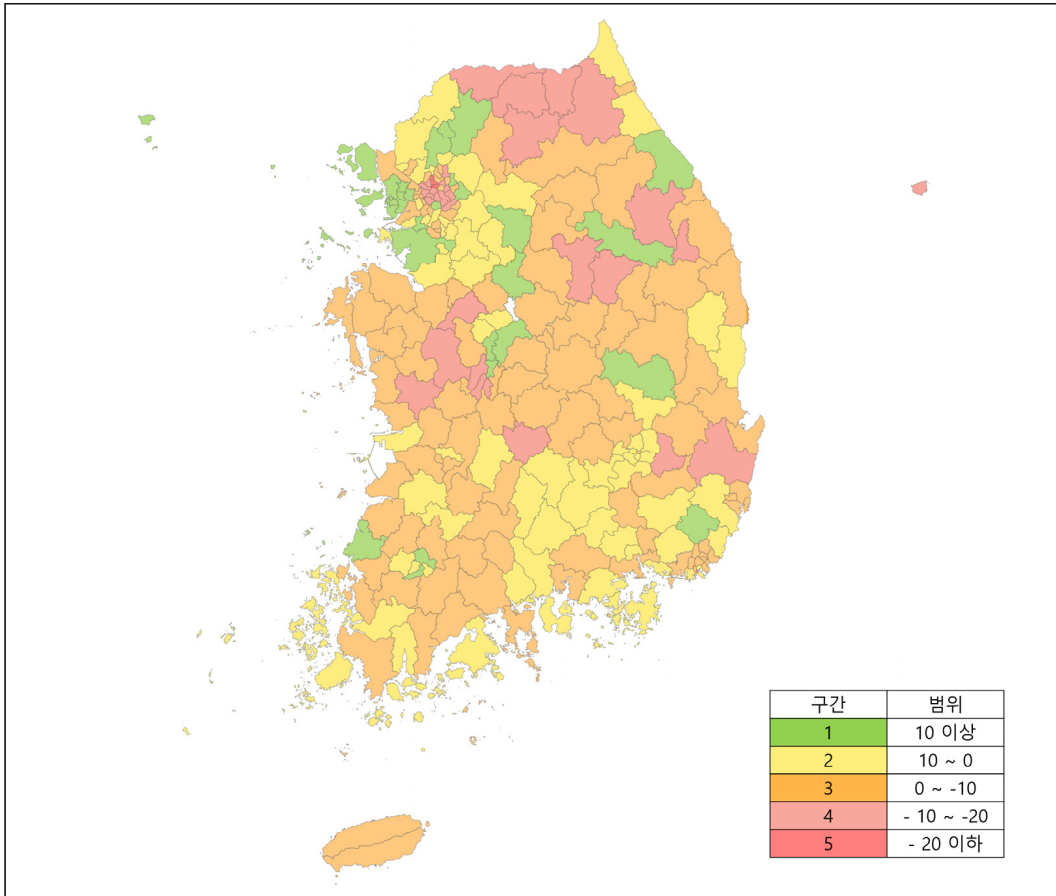
2. 자영업자 사업장 수 300개 미만 업종과 초등교육기관은 제외하였음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4]와 [그림 V-5]는 자영업자에 한정하여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매출액 변동률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규모를 자영업자에 한정하고 2020년 전체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피해에 상당한 편차가 확인된다. 자료 안에서 확인되는 시·군·구 249개 중 147개 시·군·구는 2019년 대비 자영업자의 평균매출액이 감소했지만, 102개 시·군·구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타격이 컸던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 감소율이 2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등급 산정 시 지역요소도 고려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V-4] 2019년 대비 2020년 자영업자 평균매출액 변동률 구간(전국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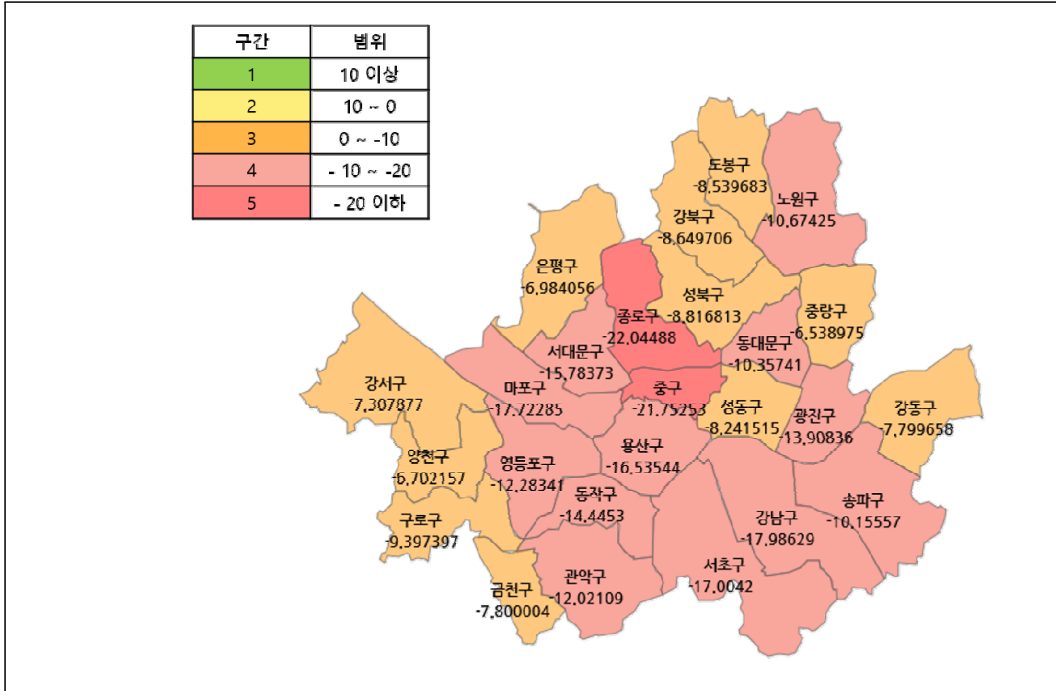
(단위: %)



주: 충청북도 증평군은 BC카드 자영업자 정보 집계 시 충분한 익명성 유지가 되지 않아 백색으로 표시함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5] 2019년 대비 2020년 자영업자 평균매출액 변동률 구간(서울 지도)

(단위: %)



주: 지도상의 숫자는 자영업자 평균매출액변동률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V-4>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변동률 감소 기준 자영업자 피해 상위 10개 시·군·구

(단위: 백만원, %)

시·군·구명	매출액변동	평균매출액변동	평균매출액변동률
서울특별시 종로구	-152121.1	-0.551	-22.04
서울특별시 중구	-154524.3	-0.406	-21.75
경상북도 울릉군	-3202.83	-0.395	-1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429854.6	-0.931	-17.99
서울특별시 마포구	-145664.5	-0.529	-17.72
강원도 정선군	-7853.25	-0.261	-17.62
강원도 양구군	-4830.779	-0.322	-17.13
서울특별시 서초구	-192148.6	-0.635	-17.00
부산광역시 중구	-38250.22	-0.345	-16.82
강원도 철원군	-9224.68	-0.290	-16.55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V-5〉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변동률 감소 기준 자영업자 피해 하위 10개 시·군·구

(단위: 백만원, %)

시·군·구명	매출액 변동	평균매출액 변동	평균매출액 변동률
경기도 화성시	219941.3	0.565	17.21
경기도 하남시	61807.72	0.544	17.8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74108.28	0.447	17.95
인천광역시 동구	16913.09	0.419	18.34
광주광역시 남구	44945.59	0.433	18.37
경기도 포천시	52651.42	0.443	20.22
전라남도 영광군	13428.82	0.417	20.49
강원도 강릉시	73841.78	0.423	21.84
경상북도 의성군	10896.44	0.544	30.35
강원도 영월군	16095.66	0.627	41.69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업종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효과 분석: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증감 기준⁴⁾

본 절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지급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5월과 7월 사이에 집행된 정책들이 업종별로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2017~2020년 2~7월간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분석과 업종과 월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패널 이중차분법 분석을 자영업자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한다.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김미루·오윤해(2020), 이우진 외(2021), 홍민기(2020) 등에서 다양하게 다룬 적이 있지만, 해당 연구들은 한계소비성향 관점에서 0.3~0.7 사이의 소비 진작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주목하고 있고, 주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에 한정된 업종별 분석은 특별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먼저 효과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이중차분법 분석은 다음과 같이 설계

4) 분석의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연구 과정에서 정책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소중한 코멘트를 주신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

한다.⁵⁾ 비교 가능성을 위해 홍민기(2020)와 이우진 외(2021) 등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2020년을 이전과는 다른 해, 즉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일어난 해로 활용하고, 제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월 기준으로 3개월 전후를 각각 0과 1을 가지는 더미로 처리한다. 이는 이전 연도와 2020년의 2~4월, 5~7월의 공통 추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가정하고, 2020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인 2020년 5~7월을 이중차분변수로 보아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월별로 이전과는 다른 추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업종 간 이질성의 확인이므로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차이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설계로 진행하기로 한다.

업종 구분은 2020년 4월이 2020년 3월 타격 이후 자연 회복이 이루어진⁶⁾ 달임에 주목하여, 해당 달에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늘어난 업종과 매출액이 줄어든 업종을 나누어 분석한다.⁷⁾

$$\Delta R_{i,t} = \alpha + \beta_1 D_1 + \beta_2 T_1 + \beta_3 D_1 T_1 + \epsilon_{i,t} \quad \text{식 (1)}$$

- $\Delta R_{i,t}$: 업종별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평균 변화
- D_1 : 2020년은 1, 2017~2019년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T_1 : 2~4월은 0, 5월~7월은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전체 업종에 대한 분석 결과, 이중차분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업종별 분석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룹을 나누어 2020년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던 업종에 한정할 경우, 32만원가량의 월별 평균매출액 증가가 유의도 1% 수준에서 유의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매출액이 감소했던 업종에 한정할 경우에는 역시 유의한 매출 변동의 증가분이 확인되지 않아, 타격을 입었던 업종에서 정책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전체 효과의 유의성을 높이지 못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출액 증가 업종, 즉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업종의 경우는 소비대체 등의 원인으로 2020년 효과 자체도

5) 정책변수와 시간변수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이중차분법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이중차분법이다.
 6) 2020년 4월의 경우 일부 지자체의 지원은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7) 참고로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과 불가능 업종이 구분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포함한 업종별 실제 최종 효과를 확인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으며,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더 높은 양(+)의 효과를 향유하는 반면, 매출액 감소 업종, 즉 피해업종은 2020년 효과 자체의 타격이 있고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6〉 2020년 4월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업종별 이중차분법 추정

(단위: 백만원)

	전체업종	매출액증가업종	매출액감소업종
이중차분변수	0.107	0.323***	-0.064
	(0.209)	(0.110)	(0.352)
2020년	-0.284***	0.161***	-0.626***
	(0.111)	(0.077)	(0.183)
5월~7월	0.021	0.011	0.029
	(0.050)	(0.030)	(0.09)
상수	0.057	0.072***	0.046
	(0.036)	(0.020)	(0.062)
관측치 수	1,729	746	983
업종 수	84	37	47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2. 유의도는 *** p<0.01, ** p<0.05, *p<0.1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7~2020년 패널자료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업종고정효과와 함께, 월별 고정효과를 시간고정효과로 추가하여 분석한다.⁸⁾

$$\Delta R_{i,t} = \alpha + \beta_1 D_1 \cdot T_1 + \beta_2 D_1 + \nu_i + v_t + \epsilon_{i,t} \quad \text{식 (2)}$$

$\Delta R_{i,t}$: 업종별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변동

ν_i : 업종고정효과

v_t : 시간고정효과(월별)

D_1 : 2020년은 1, 2017~2019년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T_1 : 2~4월은 0, 5~7월은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8) 본 설정에서는 2020년을 실험군으로 하므로 연도 내 각 달의 고정효과를 고려한다. 강건성 확인을 위해 모든 달의 더미변수를 추가하는 형태로도 분석해 보았는데, 추정 결과의 질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분석 결과 전체효과는 매출액 증분의 경우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업종인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업종은 1% 유의도에서 30만원 증가, 4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업종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질적으로는 기본모형과 유사한 결과로, 역시 2020년 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업종은 큰 피해가 확인되는 데 비해 정책효과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 오히려 2020년의 수혜효과가 발견되면서 추가적인 정책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자영업자 기준으로 2020년 4월 기준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던 업종에서는 5월 이후 정책에 따른 매출 증가가 확인되지만, 그렇지 못한 업종에서는 해당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역시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7〉 고정효과패널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전체 업종	매출액 증가 업종	매출액 감소 업종
이중차분변수	0.163	0.300***	0.056
	-0.146	-0.090	-0.243
2020년	-0.340***	0.198***	-0.746***
	-0.103	-0.063	-0.172
2월	0.061	0.051	0.068
	-0.129	-0.080	-0.215
3월	-0.038	0.029	-0.093
	-0.129	-0.080	-0.214
4월	0.006	0.095	-0.065
	-0.129	-0.0795	-0.214
5월	0.093	0.158**	0.040
	-0.119	-0.073	-0.198
6월	0.041	0.083	0.012
	-0.119	-0.073	-0.198
7월	-	-	-
상수	0.034	0.00226	0.056
	-0.091	-0.056	-0.151
결정계수	0.012	0.125	0.044

〈표 V-7〉의 계속

	전체 업종	매출액 증가 업종	매출액 감소 업종
관측치 수	1,484	640	844
업종 수	84	37	47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2. 유의도는 *** p<0.01, ** p<0.05, *p<0.1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앞에서 제시한 모형의 설정처럼 사업체의 매출 변동(증가)에 대한 고정효과를 사용하는 것은 성장이 중요한 기업이나 산업 분석, 특히 유사 규모의 사업체 분석에 있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설정이다. 이를 전제로 강건성 확인을 위해 다음에서는 기업이나 산업 분석 외의 다른 정책평가에서 자주 활용하는 로그 수준⁹⁾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한다.

$$\text{Ln}(R_{i,t}) = \alpha + \beta_1 D_1 \cdot T_1 + \beta_2 D_1 + \nu_i + \nu_t + \epsilon_{i,t} \quad \text{식 (3)}$$

$\text{Ln}(R_{i,t})$: 업종별 해당 월의 로그 매출액

ν_i : 업종고정효과

ν_t : 시간고정효과(월별)

D_1 : 2020년은 1, 2017~2019년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T_1 : 2~4월은 0, 5~7월은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표 V-8〉 고정효과패널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월별 로그매출액 종속변수

	전체 업종	매출액 증가 업종	매출액 감소 업종
이중차분변수	0.161***	0.196***	0.133***
	-0.038	-0.058	-0.048
2020년	-0.082***	0.159***	-0.266***
	-0.027	-0.041	-0.034
2월	-0.187***	-0.197***	-0.179***
	-0.030	-0.046	-0.038
3월	-0.091***	-0.068	-0.109***
	-0.030	-0.046	-0.038

9) 참고로 기업과 산업 분석 시에는 영업이익과 같이 음(-)의 값을 가지는 변수도 많기 때문에, 해당 변수들이 포함될 경우 로그는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본 자료는 매출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로그를 활용한다.

〈표 V-8〉의 계속

	전체 업종	매출액 증가 업종	매출액 감소 업종
4월	-0.044	-0.051	-0.039
	-0.030	-0.046	-0.038
5월	0.043	0.044	0.0428
	-0.029	-0.043	-0.036
6월	-0.027	-0.005	-0.0435
	-0.029	-0.043	-0.036
7월	-	-	-
상수	8.684***	8.650***	8.709***
	-0.0215	-0.0324	-0.0268
결정계수	0.066	0.155	0.119
관측치 수	1,990	863	1,127
업종 수	84	37	47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2. 유의도는 *** p<0.01, ** p<0.05, *p<0.1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이상의 추정 결과를 일반적인 로그-레벨 모형의 해석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전체 업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약 7.8%의 월별 매출액 감소에 비해, 17.5%의 매출액 증가 정책효과가 확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종을 나누어 보면 피해가 없었던 업종의 경우에는 2020년에 따른 매출액 17.2% 증가에 더하여 정책에 의한 21.7%의 추가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는 반면, 피해업종의 경우는 2020년에 따른 23.4%의 매출액 감소에 비해 14.2%의 매출액 증가만 확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⁰⁾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점을 얻을 수 있다.

10) $e^{-0.082} = 0.921272$, $e^{0.0161} = 1.174685$ 과 같이 계산하여 해석할 수 있다.

VI. 코로나19 이후 가구 소비현황 분석

1. 개요

본 장에서는 KCB 신용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이후 가구의 소비수준의 변화를 살펴본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DB는 가구별 미시데이터가 아니라 법정동별 집계자료라는 점이다. 법정동 개념은 지역단위의 집계자료 중에서도 시·도나 시·군·구 단위에 비하여 세부개념이나, 여전히 집계자료로서 ‘평균값’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분석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동일한 법정동 내에서의 소득이나 소비수준의 이질성을 감안할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한계점이다. 향후 가구원 혹은 가구별 DB를 확보하게 되면 본 연구 결과와 분석의 함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변수로는 ‘카드사용금액’을 활용한다.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과 체크카드사용금액의 합산금액이다. 법정동 단위 자료에서의 평균카드사용금액은 전체 카드사용금액에서 전체 가구 수를 나눈 값으로 정의되었다. 그림으로 수치를 보여줄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동 단위 자료를 시·군·구나 시·도별로 재구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통계는 가구 단위의 미시자료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법정동 단위로 이미 집계된 것을 더 큰 지역 단위로 한 차례 더 집계한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가구’란 KCB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이들 중에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하나의 가구를 형성한다고 가정되었다. 미성년자 등 카드 비소지자들은 누락된 것으로, 가구 규모를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가구의 개념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통계」에 등록된 세대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카드사용금액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가구특질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역, 가구원 수, 월소득, 유동성제약 수준 등이 본고에서 고려할 특질이다. 이때 월소득은 KCB가 해당 시점 기준 이전 1년 동안 여러 정보를 활용하여 추정한 값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유동성제약 수준은 2019년 1월

부터 6월까지의 현금서비스 사용금액과 제2금융권 대출잔액 금액의 평균값으로 정의되었다. 유동성제약은 소득수준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단 유동성제약을 전술한 대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카드사용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VI-1>은 가구의 소비데이터 분석 로드맵을 보여준다.

〈표 VI-1〉 KCB 소비데이터 분석 로드맵

분석 단위	환경(가구특질)	분석대상
지역 (시·도, 시·군·구, 법정동)	· 지역 · 가구원 수 · (추정) 월소득 · 유동성제약 수준 (현금서비스와 제2금융권 대출잔액)	· 카드사용금액(신용+체크카드금액)

자료: 저자 작성

2.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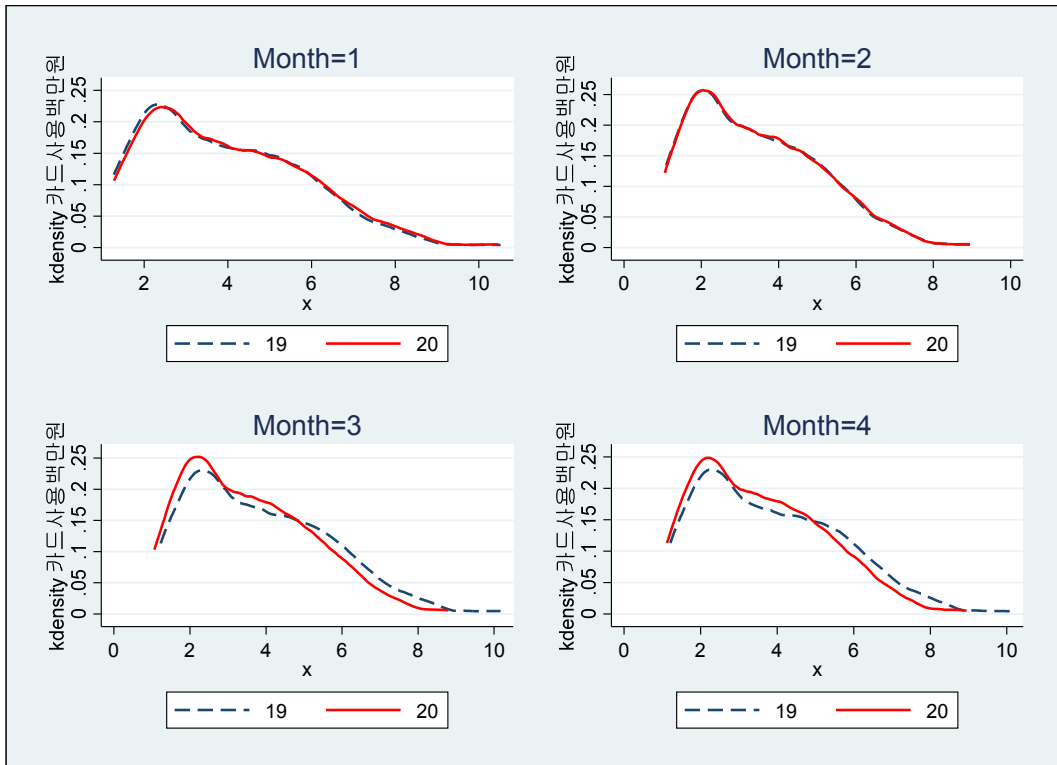
가. 시·군·구별 (재)집계자료

그래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동 자료를 재집계한 시·군·구 자료를 이용한다. [그림 VI-1]은 과거소득에 따른 카드사용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점선은 45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선 위에 있으면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카드로 소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소득은 2019년 1~6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했다. [그림 VI-1]의 (1)은 2019년 2월, [그림 VI-1]의 (2)는 2020년 2월의 데이터 값이다. 그래프만으로는 코로나19 전후로 큰 차이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그래프 모두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소득에 비하여 소비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소득 외에도 보유자산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추정된 소득만큼의 소비가 가능한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두 소비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커서 소비를 소득만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소비를 보여주는 [그림 VI-1]에서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월별로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VI-2]에서 [그림 VI-4]까지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2019년(점선) 대비 2020년(실선)에 평균카드사용금액의 확률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가시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는 시점은 3월, 4월, 5월이다. 3~4월의 경우, 확률분포 곡선 자체가 좌상향하여, 평균카드사용금액의 평균이 줄어들었고 사용금액이 낮은 영역으로 분포가 더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5월에는 이전 수준으로 분포가 회복하는 듯이 보이고, 5월 이후에는 오히려 평균카드사용금액의 확률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전 연도에 비하여 평균금액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카드소비금액이 더 증가한 것이다.

[그림 VI-2] 시·군·구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1~4월, 2019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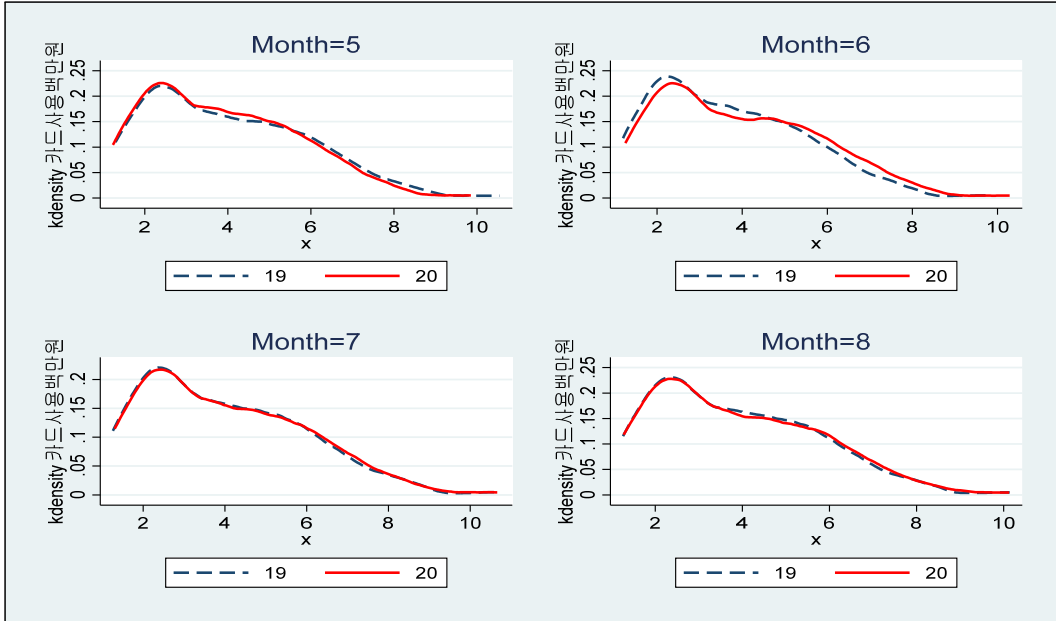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3] 시·군·구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5~8월, 2019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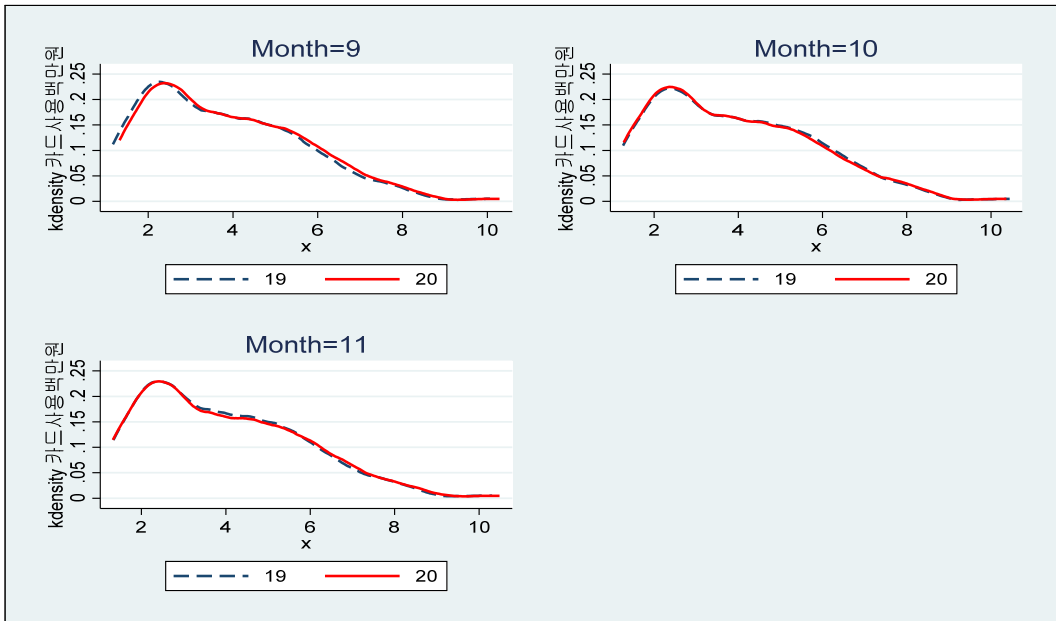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4] 시·군·구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9~11월, 2019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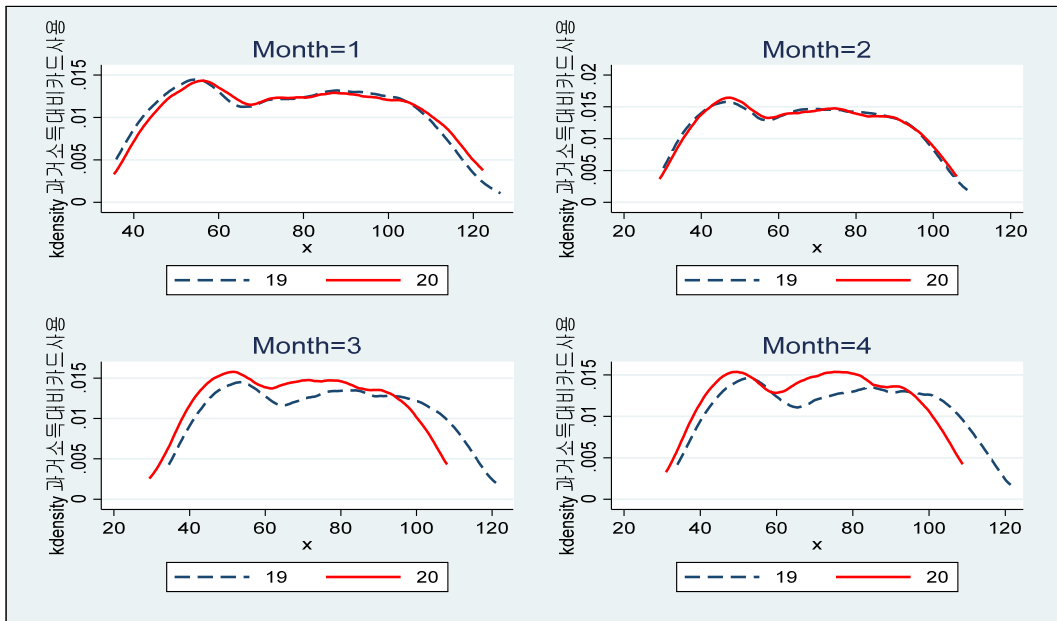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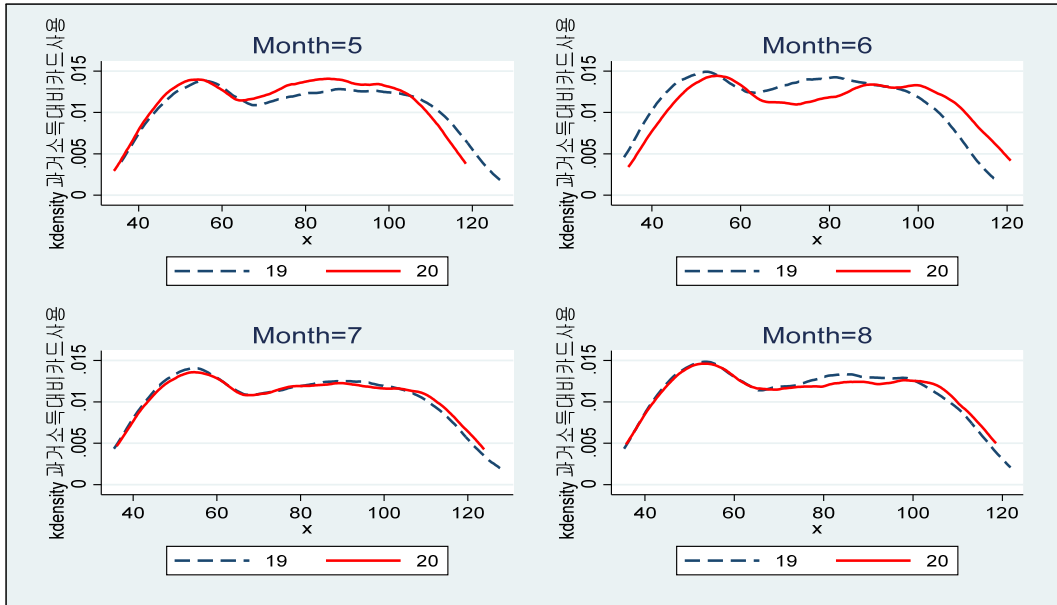
[그림 VI-5]~[그림 VI-7]에서는 과거소득 대비 카드사용금액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카드사용금액 자체의 그래프에 비하여 극점이 두 개로 양분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카드사용금액이 과거소득 값의 50% 혹은 90% 수준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년도 대비 분포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두드러진 시점은 3월, 4월, 5월, 6월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3월과 4월은 카드사용금액이 줄어든 시점인데, 소득 대비 카드사용금액 비율 역시 그와 비슷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 대비 카드사용 비율이 100% 이상의 구간에서 분포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월의 경우, 소득 대비 사용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 2019년과 2020년 간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60% 이상인 경우는 그 이전보다 분포의 폭이 좁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60~100%까지의 구간에는 2020년 확률분포가 2019년 확률분포를 상회하고 있고, 100% 이상의 구간에서는 그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100% 이상의 소득 대비 소비가 많았던 집단에서 주로 카드사용금액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6월의 경우, 전반적으로 2019년 대비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전반적으로 과거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I-5] 시·군·구별 과거소득 대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1~4월, 2019 vs 2020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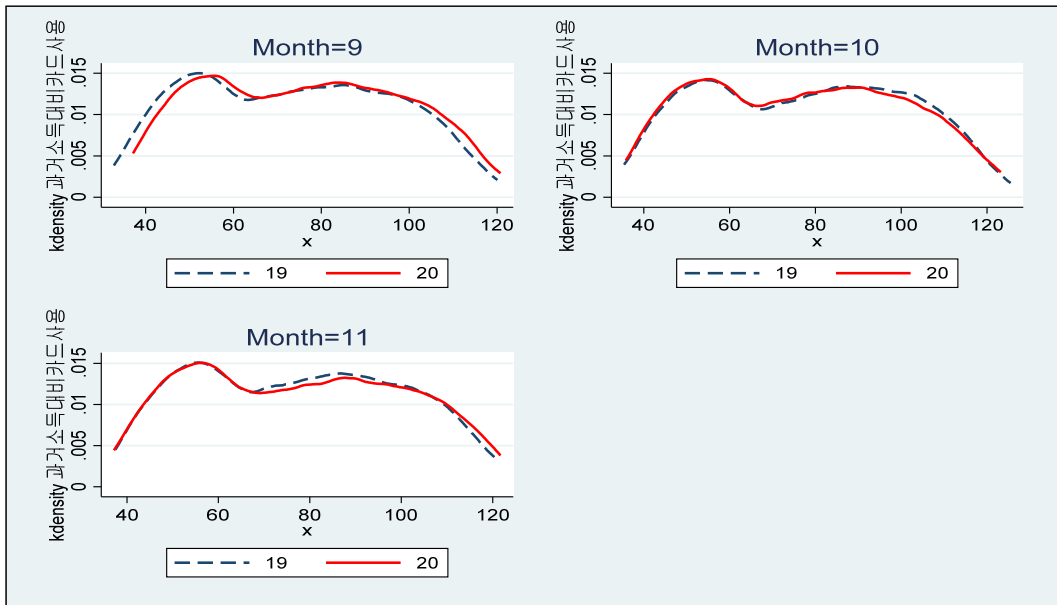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6] 시·군·구별 과거소득 대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5~8월, 2019 vs 2020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7] 시·군·구별 과거소득 대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9~11월, 2019 vs 2020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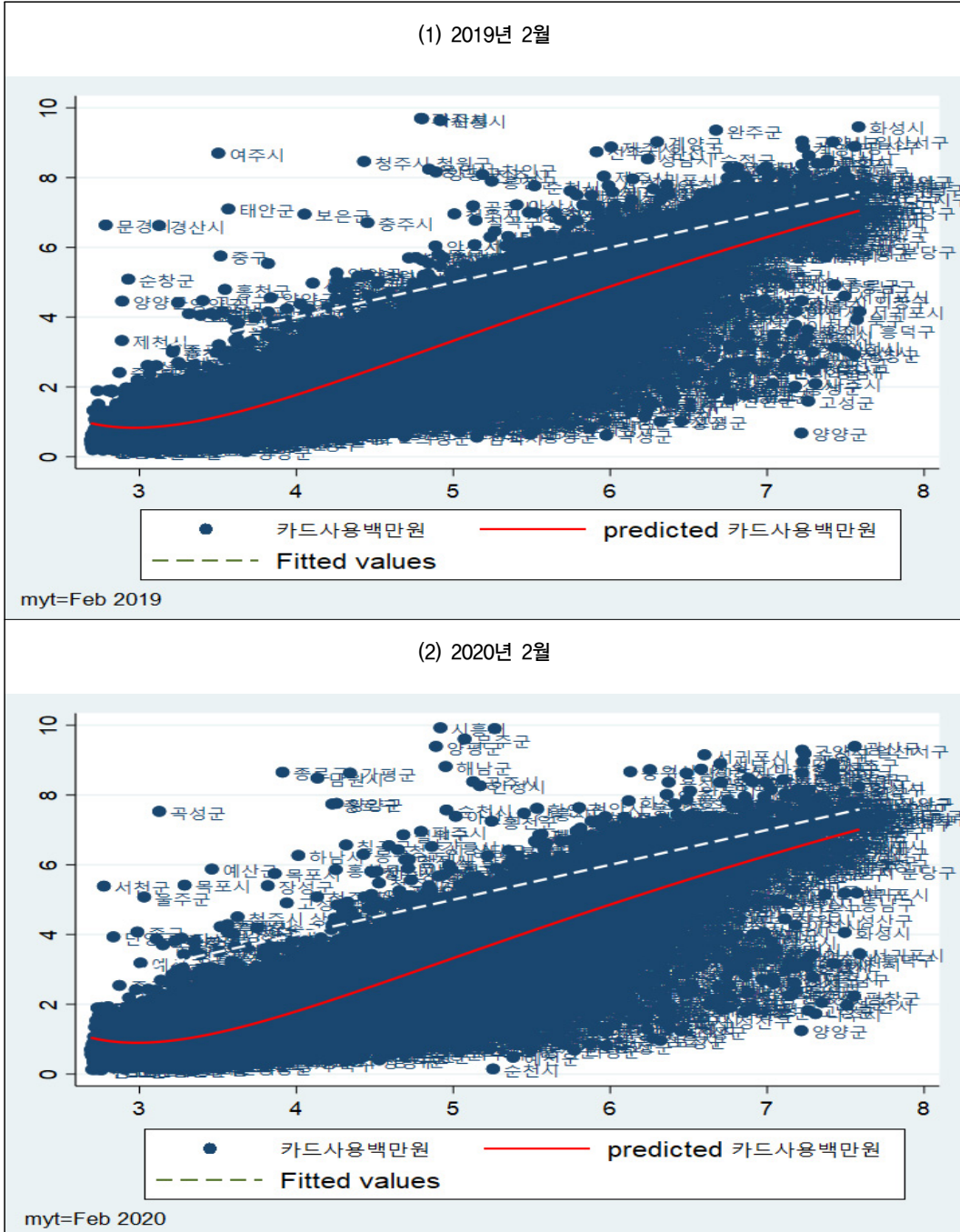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나. 법정동별 집계자료

다음은 법정동 단위별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카드사용금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VI-8]에서는 [그림 VI-1]과 마찬가지로 횡축에는 과거소득(2019년 1~6월까지의 평균월소득의 평균)이, 종축에는 2019년 또는 2020년 2월 카드사용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앞서서 살펴본 시·군·구별 (재)집계자료와 유사하게 2019년과 2020년 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과거소득이 높을수록 데이터값이 점선에 더 가까워지는데, 이는 과거소득이 높을수록 카드소비금액이 과거소득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그림 VI-1]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데이터의 추세선과 점선 간의 간격 차이이다. 시·군·구 (재)집계자료에서는 데이터의 추세선이 음(-)의 방향의 약한 포물선 모양을 취했지만, 법정동 자료에서는 양(+)의 방향의 약한 포물선 모양을 취하고 있다. 특히 300만원 이하의 추정소득을 갖는 법정동의 경우 카드사용금액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가구별 미시자료로 다시 검증하여 어떠한 그래프가 현실을 더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정동 단위의 평균사용금액에 대한 확률분포는 [그림 VI-9]~[그림 VI-11]에서, 과거소득 기준 평균사용금액에 대한 확률분포는 [그림 VI-12]~[그림 VI-13]에서 보여주고 있다. 법정동 단위의 데이터에 기반한 그래프의 경우,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에 기반한 그래프에 비하여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변화는 시·군·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VI-8]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구소비 변화: 법정동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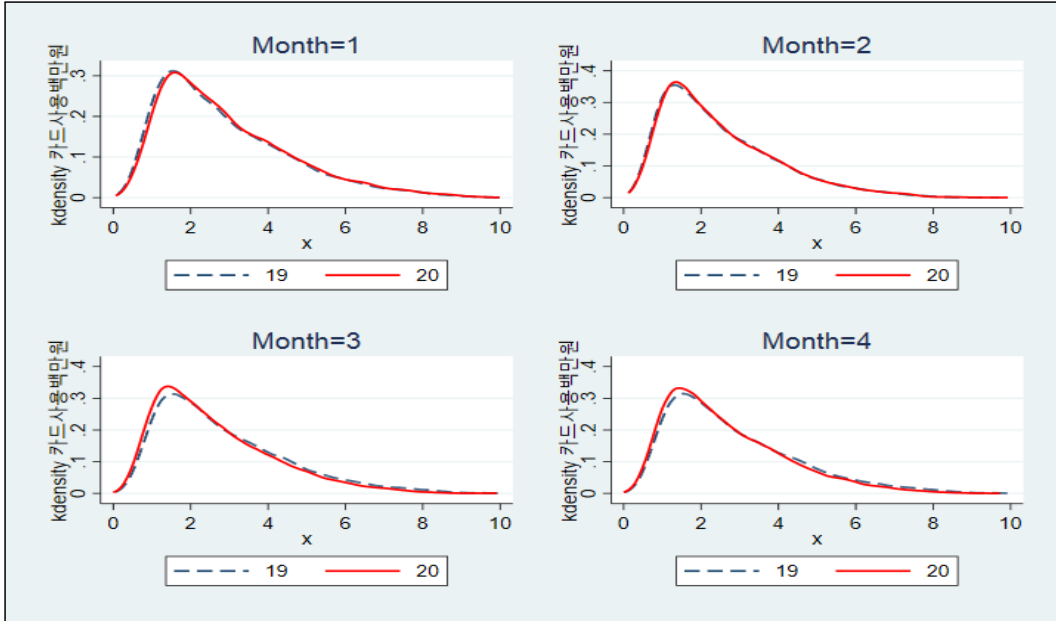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9] 법정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1~4월, 2019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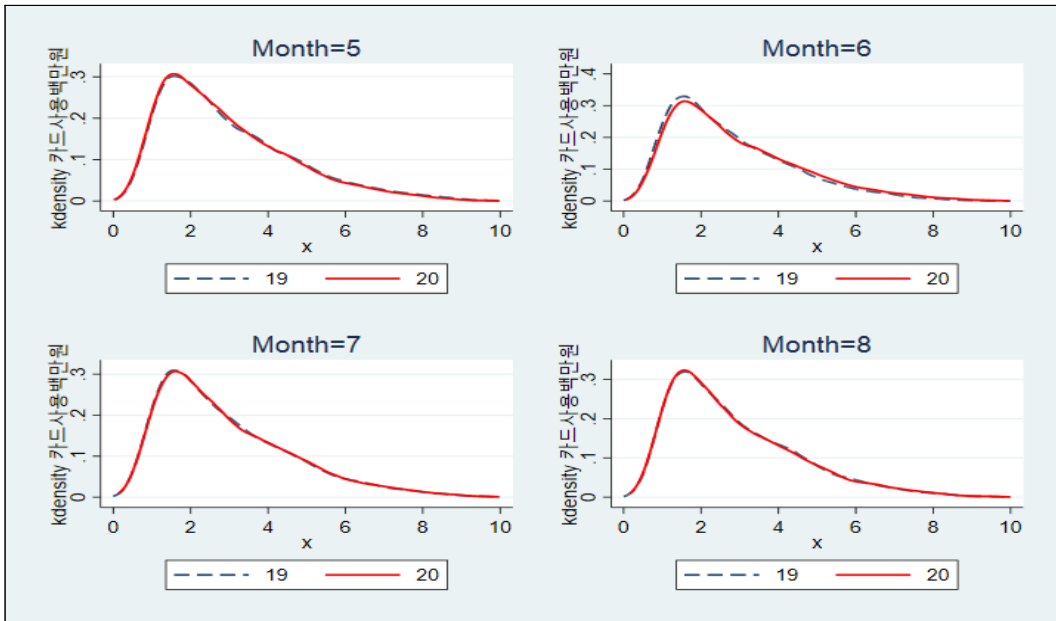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10] 법정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5~8월, 2019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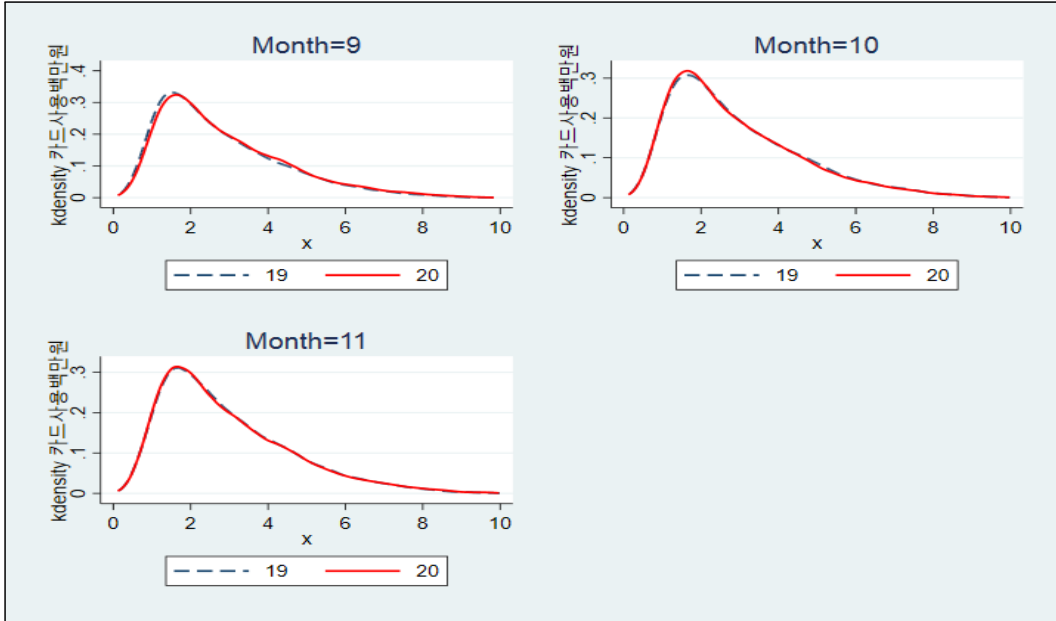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11] 법정별 평균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9~11월, 2019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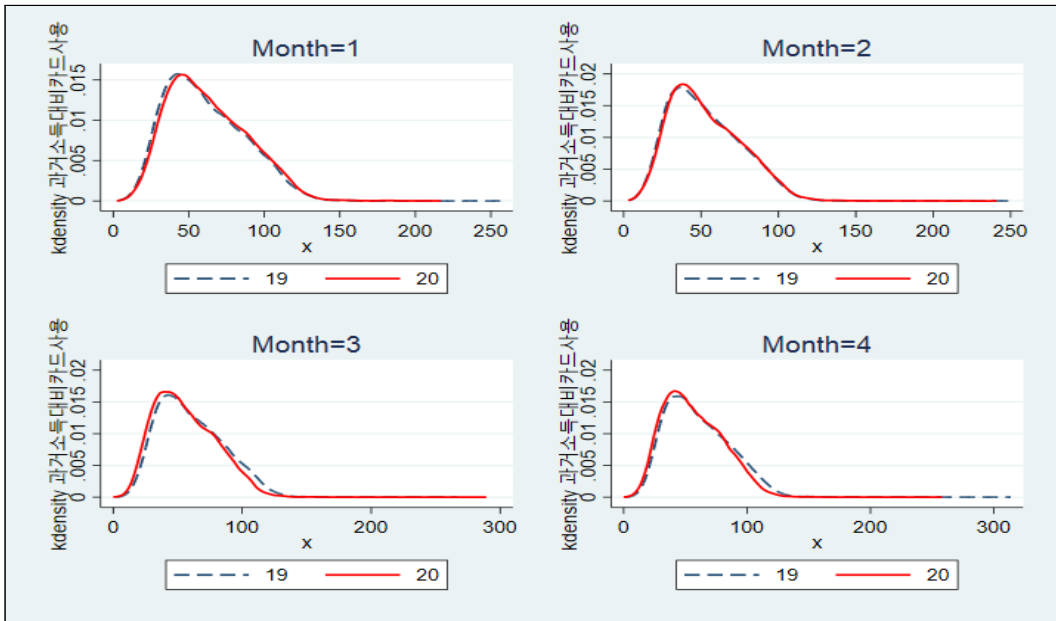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12] 법정별 과거소득 대비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1~4월, 2019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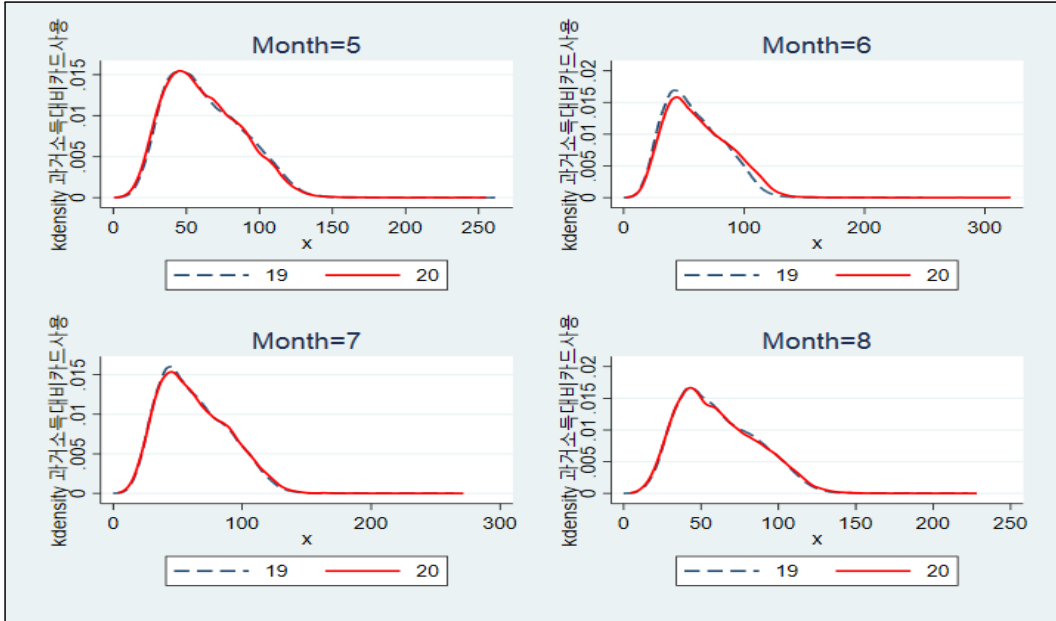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13] 법정별 과거소득 대비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5~8월, 2019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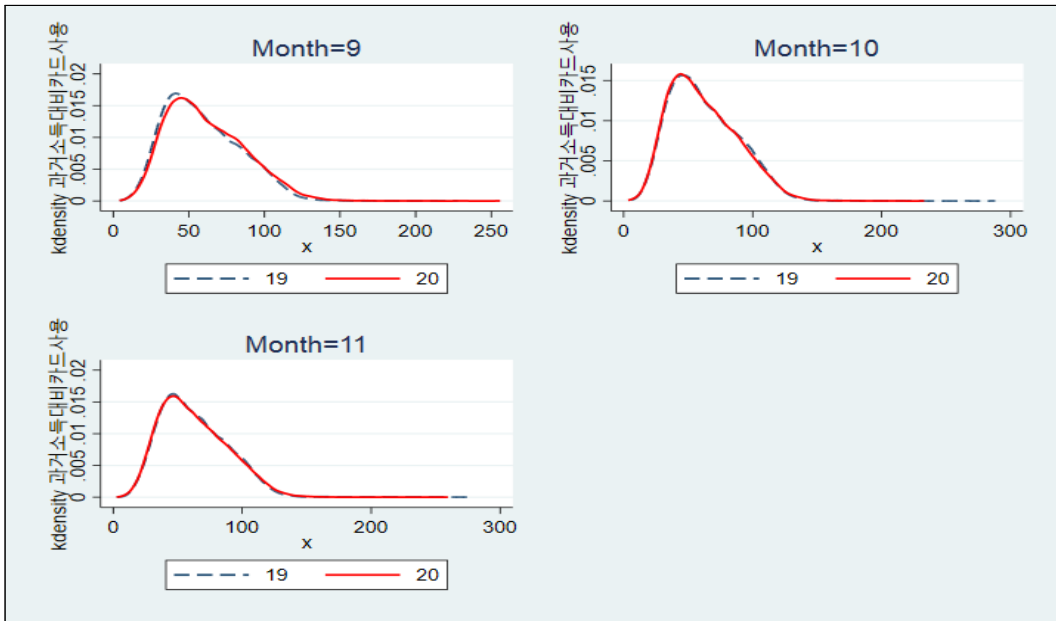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14] 법정별 과거소득 대비 카드사용금액의 월별 분포: 9~11월, 2019 vs 2020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3.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질적 소비반응

가. 가구소득 분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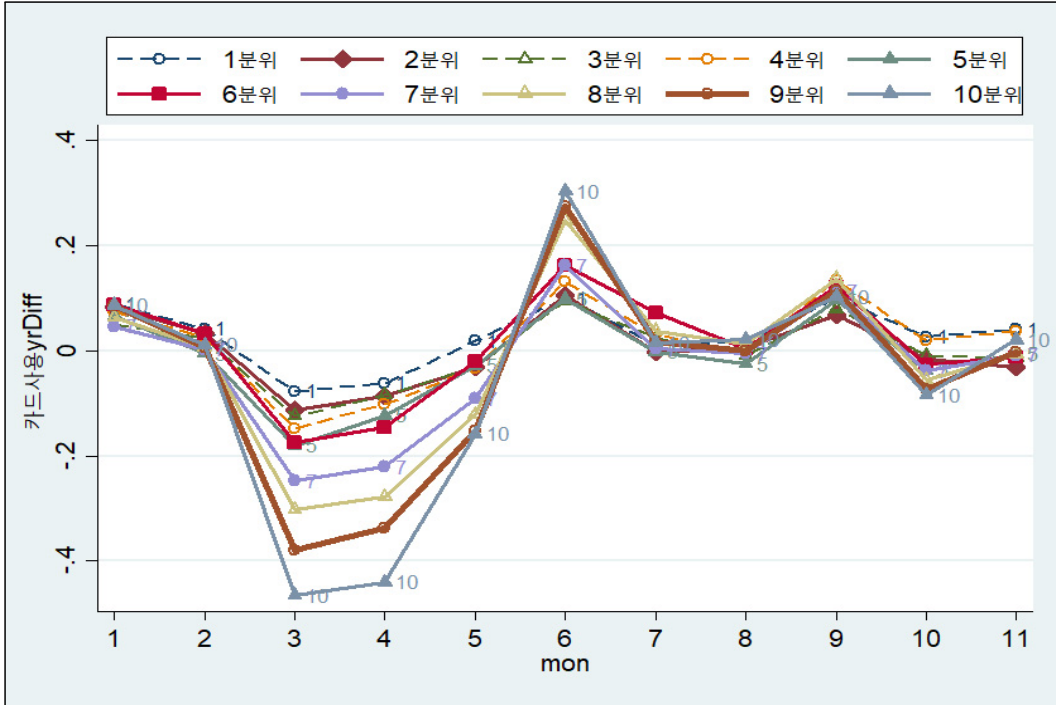
[그림 VI-15]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과거소득 분위별 소비반응을 살펴보았다. 이 그래프는 2019년 1~6월까지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법정동의 순위를 매겨 10개의 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로 전년 동월 대비 카드사용금액의 차이값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월별 카드사용금액의 연간 변화에서도 관찰한 바 있었던 것처럼, 2020년 3월과 4월에 카드사용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현저히 감소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 감소분은 10분위 고소득 법정동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나고, 1분위 저소득 법정동의 경우 가장 적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0분위 고소득 법정동의 경우, 6월에 카드소비금액을 오히려 크게 늘려 그 증가 정도가 이전 연도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2020년 10월경에도 10분위 법정동의 카드사용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 곧바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소비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상과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카드사용금액이라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수준에 견주어 비교한 카드사용금액의 경우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¹¹⁾

3~4월경에 갑자기 줄어든 10분위 법정동의 카드사용금액이 6월에 갑자기 늘어난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고소득 계층의 소비위축이 유동성제한 등의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 계층의 경우 필수재가 아닌 재화나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이 금지되었을 때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에 필수재 구매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상관없이 생존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충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11) 이는 최종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할 때까지 추가로 보완하고자 한다.

[그림 VI-15] 소득분위별 이질적 소비반응: 전년 동월 대비 카드사용금액 차이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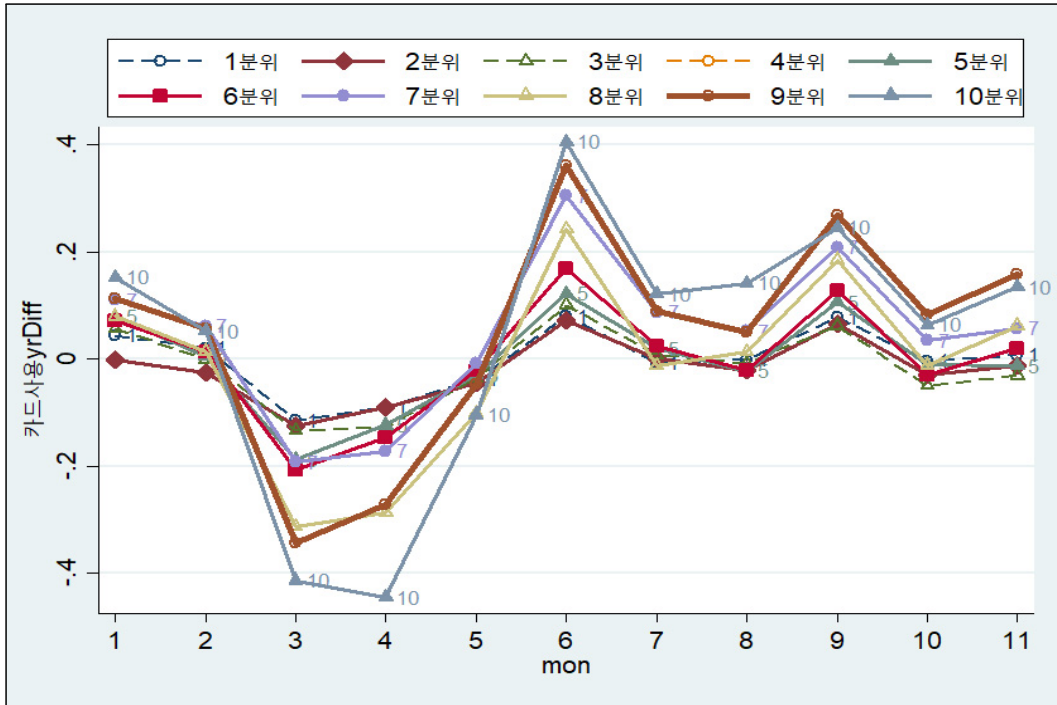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나. 평균 가구원 수 분위별

연구자가 입수한 KCB 데이터에는 법정동 단위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존재하는데, 이는 해당 법정동의 카드소지자 수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평균 가구원 수의 값이 낮으면 단독가구를, 높으면 대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평균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법정동을 일렬로 정렬하여 10개 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로 카드사용금액의 연간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VI-16) 참조). [그림 VI-16]에서 나타난 패턴은 ‘과거소득’ 분위별로 살펴본 카드사용금액의 연간 변화와 상당히 유사하다. 즉 평균 가구원 수 수치가 높은 법정동의 경우 2020년 3~4월에 카드사용금액이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6월에 다시금 급격하게 반등하였다. 이렇듯 추세가 유사한 것은 과거소득과 가구원 수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즉 가구원 수가 많을 수록 대체로 과거소득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VI-16] 평균적 가구원 수별 이질적 소비반응: 전년 동월 대비 카드사용금액 차이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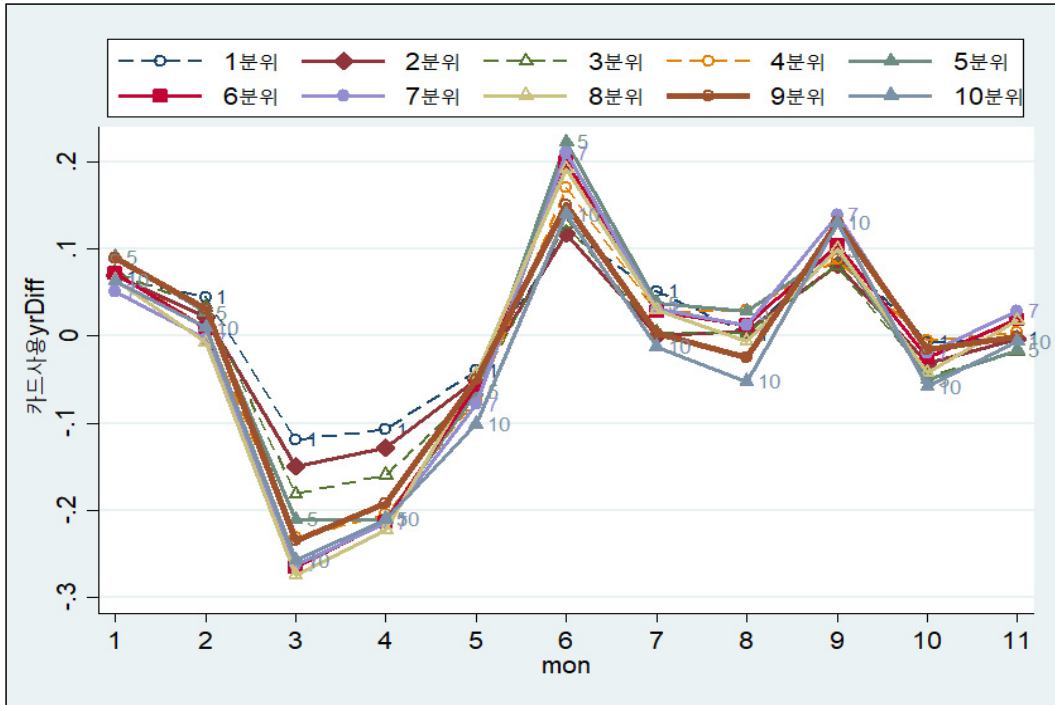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다. 유동성제약 수준별

마지막으로 유동성제약으로 인한 카드소비 사용금액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가구의 유동성제약을 가구의 현금서비스 사용금액과 제2금융권 대출 잔액의 합계로 정의하여, 법정동에 따른 10분위 지표를 생성하였다. 10분위의 경우 유동성제약이 가장 높고, 1분위의 경우 유동성제약이 가장 낮다. [그림 VI-17]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유동성제약이 높은 법정동의 경우 카드사용금액의 감소액이 특히 크게 나타났다. 과거소득이나 평균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0분위 법정동의 3~4월 카드사용금액이 크게 감소했다가 6월에 크게 반등하는 결과를 보였다. 유동성제약의 경우, 유동성제약이 가장 높은 10분위 법정동이 일반적인 카드사용금액 ‘하강’ 국면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경향만 보이고, ‘상승’국면의 경우 두드러진 반등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VI-17] 유동성 제약 수준별 이질적 소비반응: 전년 동월 대비 카드사용금액 차이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VII. 코로나19 사태 대응 재정정책 함의

1. 사업체 지원 관련-긴급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제 V 장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규모별·지역별·업종별·월별 등 특성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기초통계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자금조달이나 전환대응 등에서 취약하여 긴급한 정책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정해서 볼 경우에도, 코로나19가 미친 경제적 영향에 있어 업종별 이질성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업종별로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책패키지가 피해업종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의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위상과 성격을 보다 재정정책 전반의 차원에서 명확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동일한 논리 선상에서 진행하려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는 정의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육하원칙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의한 사례는 드물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개념화와 위상 확인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21년 4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목적 모두에 부응하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정책지원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의료로 분류해 볼 때 응급의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응급의료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분명히 갖지만 응급의료 외의 의료체계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응급의료 자체가 특정 사건에 있어 의료 전체를 대신할 수도 의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가 야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도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명히 정의하고 유형 및 재정정책에서의 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와 유형 및 재정정책에서의 위상 검토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할 수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명칭 자체의 의미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재정당국이 (언제)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경제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재난의 극복을 돕기 위해 (누구에게) 재난상황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 긴급구제 없이는 재난상황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체·개인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삼아 (어떻게) 개인이나 사업체에 일률 또는 차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상의 정의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재난상황의 일시적 경제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대상을 돕기 위해 재정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정의되며, 다만 대상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직접효과 외에도 간접효과 등을 기대할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되어, 현재까지의 논의를 최대한 포괄할 수 있게 된다.¹²⁾

다음으로는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에 있어 보편과 선별에서 보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선별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 국민을 맞춤형으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도 선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맞춤형이나 일률이나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있어 주된 지원 논리는 크게 정부의 직접적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 정부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 손실을 보상

12)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연혁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부처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내용의 긴급재난지원 성격의 지원이 이뤄져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급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1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지급된 새희망자금(2차), 버팀목자금(3차), 버팀목 플러스자금(4차)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재난지원금을 분류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의 전반적 내용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2021) 자료를 참고하라.

하자는 입장과 해당 사항과 관계없이 재난상황에서 재난을 독자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는 입장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로 손실보상의 논리를 따를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재난상황에서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응급으로 지원한다는 피해지원의 논리라면 대기업이 제외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손실보상의 경우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할 수 있다면 정부의 규제가 피해금액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지원으로도 손실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지원의 틀 안에서 손실보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만일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더라도 손실보상 외에 기타의 피해지원도 함께 수행할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산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긴급재난지원금 피해 규모의 산정 기준: 특성집단별 평균 피해 기준 등급화

다음으로는 피해 규모의 산정 시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실에서는 개별 손실의 총합을 피해 규모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 없이도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는 2019년 이전의 자료로 분석을 한다면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도출되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체의 손실은 이익과 대칭에 가깝게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계산된다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피해의 지표는 이익을 함께 고려한 총합 기준의 손실인데, 총합을 어느 단위에서 구할 것이냐에 따라 정책적 메시지가 담긴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경제 전체의 총합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만을 피해로 본다면, 이는 사업체가 재난상황에서 업종-규모-지역-고유비즈니스 모델과 노력의 수준을 바꾸었을 경우 해당 금액 이상의 피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다음으로 만일 손실집계 기준을 지역과 업종·규모로 본다면, 동일한 지역·업종·

규모의 사업체들이 입은 평균 피해는 피해로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피해는 고유비즈니스 모델과 노력 수준의 변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난상황에서 업종이나 규모·지역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업종-규모-지역 기준의 평균 피해액을 피해 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로 본다면, 보상이 필요한 피해액 규모 기준을 사전에 결정하고, 피해액 총량을 확인한 후 단계별 접근을 통해 합리적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업종-지역별로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 카드매출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을 업종-지역-규모별로 맞춤형으로 구성된 등급별 테이블을 정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해당 집단별 평균 피해를 피해로 인정할 경우, 해당 집단의 피해가 확인되면 집단 내에서 매출이 늘어난 사업체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 만일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난상황에서의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별 사업체 중 매출이 특정 기준 이상 감소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피해의 식별에 있어서는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재난과 관계 없는 일상적인 요소나 정책적 메시지의 문제 차원에서 타당성이 높지 않은바,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싶은 집단 수준을 정하고 피해등급을 정해 등급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 설계방식은 정액방식과 비례방식 등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측의 장점을 보완한 등급별 맞춤형 지원이 기본 지원형태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정액방식의 경직성 및 형평성 논란과 완전한 비례방식의 적용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업종별·규모별·지역별 피해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등급화 맞춤형 설계는 내신등급, 병역등급, 연분 9등법-전분 6등법 등 공시적·통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방식이므로, 적절히 설계할 경우 형평성과 효과성을 수용성 높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다만 등급화 맞춤형으로 제공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치 못할 개별 상황이

있어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급별 지원을 기본적·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따른 개별 상황, 즉 개별 사업체가 유사 업종·유사 규모·유사 지역의 사업체 평균보다 더 큰 재난피해를 입은 정당한 사유와 피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체 자료에 기반하여 보조적·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표 Ⅶ-1〉 규모별·업종별 등급화 방식 예시: 2020년 2월 자영업

12월 평균매출액 감소등위 (자영업)	업종명(예시) ¹⁾	평균매출액 감소(만원)	BC카드 가맹점 수 (개)	피해 규모 예시 (단순순위)
1	운송장비용 연료소매업	-428.29	18,097	상위
2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189.02	102,600	상위
3	욕탕마사지및 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148.21	10,530	상위
4	오락장운영업	-147.32	49,440	상위
5	한식음식점업	-146.15	456,058	상위
6	공연시설운영업	-105.42	1,444	상위
7	외국식음식점업	-86.52	177,838	상위
8	기타스포츠키 시설운영업	-74.31	41,999	상위
9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72.42	3,450	상위
10	기관구내식당업	-45.06	1,579	상위
11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44.09	1,727	상위
12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36.00	42,174	상위
13	예술학원	-32.61	40,408	상위
14	기타 간이음식점업	-26.35	73,885	중위
15	문화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22.19	59,668	중위
16	기타대형종합소매업	-21.34	1,456	중위
17	식물원동물원및자연공원 운영업	-20.88	757	중위
18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20.32	3,544	중위
19	사무용기기안경사진장비및정밀기기소매업	-20.30	20,276	중위
20	섬유의복신발및가죽제품 소매업	-20.14	156,650	중위

〈표 Ⅶ-1〉의 계속

12월 평균매출액 감소등위 (자영업)	업종명(예시) ¹⁾	평균매출액 감소(만원)	BC카드 가맹점 수 (개)	피해 규모 예시 (단순순위)
21	신선냉동및기타수산물 소매업	-16.42	1,152	중위
22	화장품비누및방향제 소매업	-15.41	74,995	중위
23	시계및귀금속소매업	-11.59	10,277	중위
24	의료용기구소매업	-8.45	902	중위
25	이용및미용업	-8.20	135,618	중위
26	도서관기록보존소및독서실운영업	-7.81	7,716	중위
27	예술품기념품및장식용품소매업	-6.96	10,633	하위
28	육상여객운송업	-5.71	45,902	하위
29	컴퓨터및통신장비수리업	-5.12	3,016	하위
30	전문서비스업	-3.50	42,599	하위
31	부동산업	-2.92	7,042	하위
32	방문교육학원	-2.70	786	하위
33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 출판업	-2.40	13,413	하위
34	세탁업	-1.96	22,426	하위
35	건강보조식품소매업	-0.97	19,971	하위
36	자동차신품판매업	-0.51	541	하위
37	운송장비임대업	-0.11	2,725	하위
38	기술및직업훈련학원	-0.11	2,790	하위

주: 1) 접근 방법론을 보이기 위해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자영업 대상 평균 BC카드 매출액 감소등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실제로 적용할 업종을 제시한 것은 아님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라. 긴급재난지원금 피해 규모 산정 시의 개별 고려요소: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다음으로는 피해 규모의 산정에 관해 살펴보자. 사업체의 피해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 감소분, 매출액과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은 판매·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고정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로부터 추론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발생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전수자료가 아니므로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12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전체 영업이익 피해 규모를 다음 산식에 따라 개산(概算)해 보기로 한다. 앞서 제시한 정책제언대로 업종과 지역으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에도 해당 계산식을 준하여 활용할 수 있다.

$$\text{월별영업이익 피해 규모} = \text{전년 동월 대비 매출감소액} \times \frac{1}{\text{카드점유율}} \times \frac{1}{\text{카드사용비율}} \times \text{영업이익률} \quad \text{식 (4)}$$

이에 따른 2020년 12월 자영업자 전체 영업이익 피해 규모는 약 0.74조원이다.¹³⁾ 참고로 판매·관리비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감소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임차료의 대부분, 일부 감가상각비 이자비용(고용총량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과 인건비 등이 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서비스업의 경우 판매원가는 비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되, 판매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에서 지역·규모·업종별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홀로 영업하거나 가족과 함께 영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 인건비나 가족 인건비를 포함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고정비적 성격을 가지는 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경제총조사」 등 통계청 자료에서 업종별·지역별 비율을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업종별 국세청 평균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업체 지원 관련-향후 정책과제

우리는 이상에서 신용카드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업종별·지역별·규모별로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정책이 피해수준이 높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충분한 효과를 주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위해 제도 설계와 집행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3) 매출액 감소분 1,049,035백만원, BC카드 점유율 24%, 카드사용 비율 68%(한국은행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결과」, 보도자료, 2019. 4. 17.), 매출액영업이익률 12%(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를 예시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번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재난발생 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설계와 집행의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의 명확화와 정책 인프라 구축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충분하게 기울여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법인 기준으로 분류하는 자영업자와, 인원 기준으로 분류하는 소상공인 개념 자체의 통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범위의 명확화가 기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조준할 수 있는 정책대상의 정의부터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일반적인 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일부로 분류하여 대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현재 추진체계를 보아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일부 분류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과 적은 인력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확충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이들에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실시간 종합정보체계 구축

이번 코로나19의 긴급 피해대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한 점이 정책대응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앞으로의 재난발생 시에도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대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의 품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이들에 대한 정보 확보와 구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전에는 활용하지 못했던 보조 인프라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업종,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자료는 실시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최종 정리자료 및 정산용 자료로만 활용하되,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거나 동등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업종·기간별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정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제공하여 현재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정책 이슈인 준비되지 않은 창업, 과밀화와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의 경우 전체적인 피해의 크기보다도 비대칭적인 피해의 발생 문제가 더 심각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지역이나 업종에서의 창업은 되도록 지양하도록 하고 기존의 업체들의 업종 전환 등은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공급자인 정부는 물론,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있어서도 기본적인 정보의 확보와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긴급재난지원 재정정책과 정규 재정정책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연계 대응

다음은 정책들의 재구조화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도 다른 중소기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대상별·목적별·수단별·단계별로 정책을 정리하여 긴급 대응정책과 정규 정책을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응급체계로서의 재난지원금 정책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재난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규 정책들을 함께 관리하고 제공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론으로서 급박하고 일시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할 수 있거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피해의 회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의 규모와 설계를 고려할 때 더 적합하다. 그러므로 응급대응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자세는 지양하고, 기존의 다양한 재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가 있었으나 응급 대응의 필요성이 낮아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지원, 공공조달시장 제공정책 등 다양한 정규 재정정책

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잠재적 정책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잠재적 정책대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긴급재난지원금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응급대응으로 피해가 크고 피해 감수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의 영구적 피해를 임시적으로 막아주는 정책으로서 그 역할을 이해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규적인 재정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에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벗어나 경계에 있는 사업체 등 배제된 사업체에는 긴급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규적인 지원을 통해 재난상황을 극복하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 규제 당국과 지원 당국의 업무 칸막이 완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들이 많아, 해당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정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획재정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방역 등의 사유로 규제가 이뤄졌을 때에는 해당 정보가 지원정책을 설계하는 부서에도 충분히 전달되도록 컨트롤 타워를 적절히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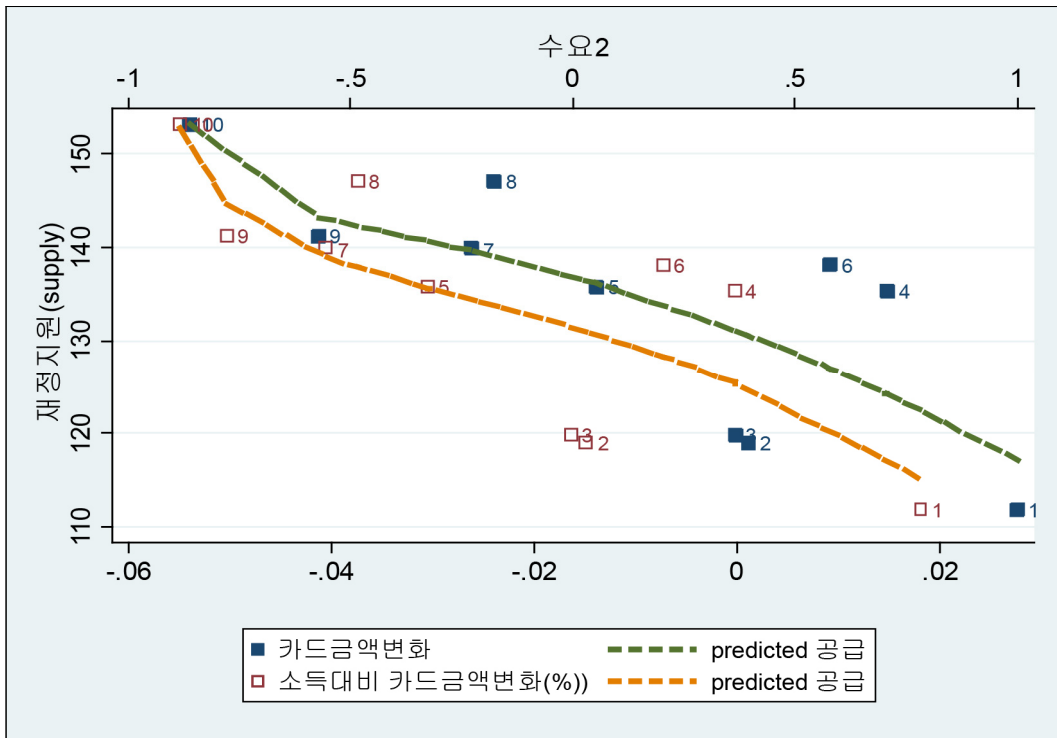
3. 가구소비 관련 재정정책 평가 및 정책함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재정정책과 소비충격을 기반으로 재정정책의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여 얼마나 매칭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분위별로 가구의 정책수요과 정책공급을 살펴본다. [그림 VII-1]에서 횡축은 카드사용금액의 2019~2020년 차분값(‘수요1’)과 과거소득 대비 카드사용금액의 변화율(%) (‘수요2’)을 나타내고, 종축은 재정지원의 규모를 나타낸다. [그림 VII-1]에서의 표식은 소득분위별 수요와 공급 수준을 나타내며, 점선은 재정정책 수급의 추세선을 표시한다. [그림 VII-1]을 살펴보면, 재정정책의 수요의 지표와 상관없이 우하향

하는 추세선을 보이는데, 이는 소비가 크게 줄어든 소득분위에 가장 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 일반적인 취약계층은 아니므로 재정수요 집단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충격이 가장 컸던 집단인 만큼, 내수를 진작하고자 하는 정부당국의 관점에서는 이들 대상을 재정수요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소득층의 소비는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 예를 들어 사치재 분야에 대한 국가적 보조금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KCB의 소득지표는 추정소득으로 과거에 관찰된 변수에 기반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실시간 경제상황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본고에서는 ‘과거소득’을 정의할 때에만 사용하였다. 향후 실질적인 소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충격’을 이용하여 재정수요가 높은 집단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I-1] 소득분위별 가구의 정책수요와 정책공급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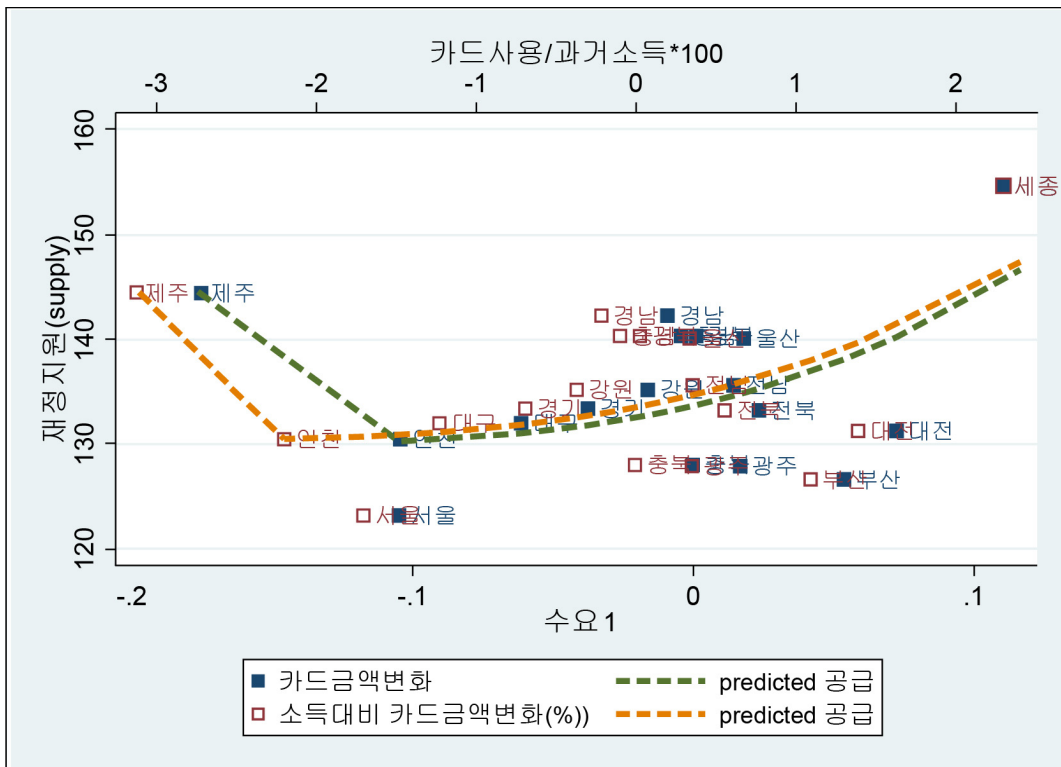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두 번째로 지역별 재정정책의 수급을 살펴보았다. 광역시·도별로 재정정책의 수요1, 수요2, 공급지표를 생성하여 수급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림 VII-2]를 살펴보았을 때, 제주와 세종지역을 제외하는 경우 역U자형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충격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 추세선이 우상향하고, 소비충격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 추세선이 우하향하는 것이다. 소비충격이 클수록(음(-)의 값이 커질수록) 재정지원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의 지역별 수요-공급이 적절히 매칭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충격이 가장 큰 지역에서 외려 재정정책의 공급이 낮았다면, 이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가구들의 소비충격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충격이 재정정책에 의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음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I-2] 지역별 가구의 정책수요와 정책공급

(단위: 백만원)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VIII. 결론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을 설계할 때 경제주체의 상황을 파악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입수하고 그러한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주체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효율적 재정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였고 그 효과를 사업장과 가구 측면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장의 경우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의 규모별·업종별·지역별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피해는 기간별·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크게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주요 피해업종과 기타 업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업종의 경우 충분한 피해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효과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조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미 있는 정책들이었음을 전제하되, 기존의 제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제2차와 제3차 재난지원금은 규모별로 지원하여 업종이나 지역별 피해를 형평성 있게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완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업장 매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정정책 전반에서의 위상과 설계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긴급재난 지원정책들은 전체 재정정책의 일부인 응급정책으로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규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사업체의 영업지표 감소가 코로나19의 피해와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적 메시지를 담은 지역-업종-규모별

등급별 피해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두 번째 분석은 가구의 소비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해당 분석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코로나19 시기의 소비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직접효과를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이 2020년 5월 지급된 것으로 고려하여 5월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구의 소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구원 수별, 유동성제약 수준별 등으로 월별 카드사용액의 추이를 살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첫째, 소득수준이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유동성제약 수준이 낮을수록 충격에 대한 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충격으로 카드사용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월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회복될 때 소득수준이 낮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카드사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여력이 큰 집단에서 충격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타난 만큼,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수준이 코로나19나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가구의 소비변화를 코로나19 피해수준의 지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비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도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유동성제약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양(+)과 음(-)의 충격에 대하여 비대칭적인 소비행태를 보인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카드소비액 측면의 부정적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나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카드소비액 측면의 긍정적 효과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이 양(+)과 음(-)의 충격에 대칭적인 소비행태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유동성제약이 높은 집단의 경우 소비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 이러한 소비가 필수적인 소비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취약계층 대상을 정의하는 데 이러한 유동성제약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긴급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긴급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

족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및 정보 파악, 정책 체계화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었지만 이를 적절히 극복할 경우 정책적 대응체계나 정보체계 구축, 경제의 체질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도 코로나19 이전에는 국책연구원에서 일반적으로 취하지 않았던 접근방식에 따라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도 특히 의미가 있다. 비록 부족한 연구이지만 본 연구의 내용이 향후 긴급재난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설계 및 대응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기획재정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보도참고자료, 2021. 4. 1.
- 김경근·염명배, 「소비 대리변수로서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역별 소비특성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33권 제1호, 2015, pp. 121~142.
- _____,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소비 유출입 특성 연구」, 『경제연구』, 제35권 제4호, 2017, pp. 129~153.
- 김미루·오윤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포럼』, 제281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pp. 1~8.
- 남재현·이래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8권 제1호, 2021, pp. 63~95.
- 노대명,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81권 제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p. 64~84.
- 여유진·김성아,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p. 1~12.
- 오삼일·이상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21-1호, 한국은행, 2021.
- 이성호·최석환,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발생의 지역상권 영향 분석 수원시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73호, 2020, pp. 167~208.
- 이우진·강창희·우석진,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2021.
- 장우현,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지원], 『재정포럼』, 2021년 4월호, 통권 제298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 26~52.

전승표 · 이철 · 이재성, 「소비와 검색 활동으로 바라본 COVID-19의 영향과 시사점」,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21, pp. 383~400.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데이터베이스 2021」, 2021.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 2010~2018년도 자료, 2020.

한국은행,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 4. 17.

_____,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2020.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차 조사자료), 2019.

홍민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노동리뷰』 제189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

〈웹사이트〉

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108/list.do?menuNo=200355>, 검색일자: 2021. 10. 12.

KOSIS, 「지급수단별 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043Y051&conn_path=I3, 검색일자: 2021. 10. 12.

CSSEGISandData, “JHU CSSE Covid 19 Raw Data,”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검색일자: 2021. 4. 30.

WHO, “Our World in Data,”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검색일자: 2021. 2. 23.

부록

〈부표 1〉 시도별 가구 신용카드사용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분

(단위: 억원)

시도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서울	4,282	2,842	-6,018	-6,008	-2,385	4,959	254
부산	938	874	-1,795	-1,757	-781	1,645	417
대구	1,487	878	-1,352	-1,158	314	1,385	-285
인천	459	218	-1,667	-1,799	-874	1,411	585
광주	282	88	-379	-313	23	1,182	-154
대전	475	445	-439	-431	172	384	-727
울산	163	151	-683	-568	-200	690	333
세종	972	811	609	624	890	417	197
경기	6,388	4,685	-3,545	-3,003	1,368	10,550	4,111
강원	325	234	-302	-258	-12	959	409
충북	602	416	-256	-155	219	1,121	361
충남	942	811	-111	282	930	1,489	632
전북	354	315	-239	-156	102	1,105	347
전남	366	320	-172	-247	89	904	206
경북	390	105	-1,598	-1,218	-212	1,213	275
경남	759	938	-1,054	-935	-146	2,038	564
제주	117	31	-332	-424	-266	71	-95

주: 법정동별 평균금액(0 포함)과 가구 수를 곱한 값을 시도별로 시점(연도와 월)별로 합산하여 시도별 총량을 구하였음. 표의 값은 해당 총량을 동월에 대하여 2020년도 값에서 2019년 값을 제한 것임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2〉 시도별 가구 신용카드사용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단위: %)

시도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서울	4.63	3.54	-6.68	-6.64	-2.51	5.71	0.27
부산	3.73	4.06	-7.39	-7.21	-3.05	7.17	1.67
대구	7.96	5.52	-7.62	-6.44	1.67	7.71	-1.44
인천	1.92	1.05	-7.06	-7.59	-3.56	6.40	2.49
광주	2.28	0.82	-3.09	-2.57	0.18	10.28	-1.24
대전	3.75	4.06	-3.60	-3.53	1.34	3.21	-5.65
울산	1.77	1.92	-7.80	-6.43	-2.17	8.28	3.70
세종	41.92	39.87	26.11	27.24	36.89	14.87	6.60
경기	5.58	4.72	-3.15	-2.66	1.16	9.75	3.51
강원	3.15	2.61	-2.97	-2.57	-0.12	10.01	3.98
충북	5.51	4.37	-2.39	-1.45	1.96	10.83	3.25
충남	6.49	6.49	-0.78	2.00	6.31	10.73	4.27
전북	2.88	2.99	-1.98	-1.31	0.83	9.70	2.83
전남	3.38	3.43	-1.60	-2.34	0.81	8.88	1.89
경북	2.39	0.75	-10.11	-7.70	-1.29	8.03	1.70
경남	3.23	4.67	-4.66	-4.15	-0.62	9.49	2.42
제주	2.22	0.68	-6.46	-8.19	-4.89	1.42	-1.77

주: 법정동별 평균금액(0 포함)과 가구 수를 곱한 값을 시도별로 시점(연도와 월)별로 합산하여 시도별 총량을 구하였음. 표의 값은 해당 총량을 동월에 대하여 2020년도 값에서 2019년 값을 제한 것임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3〉 시도별 가구 체크카드사용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분

(단위: 억원)

시도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서울	1,042	272	-2,451	-2,143	-279	2,307	805
부산	382	355	296	1,143	1,428	1,840	1,542
대구	457	48	-693	-424	13	510	200
인천	-58	-307	-916	-888	-253	484	399
광주	195	32	-200	-179	208	577	178
대전	196	-1	-351	-288	269	1,070	1,134
울산	144	-2	-348	-170	212	574	374
세종	206	158	105	183	305	210	202
경기	1,834	31	-1,989	-2,719	-1,485	2,171	1,124
강원	238	-25	-309	-210	77	432	327
충북	271	-38	-351	-238	204	494	264
충남	400	49	-366	-171	438	619	368
전북	246	2	-209	-135	282	634	390
전남	320	63	-214	-207	134	486	213
경북	284	-107	-877	-512	148	778	440
경남	446	1	-713	-510	190	1,047	624
제주	70	-40	-120	-133	77	135	27

주: 법정동별 평균금액(0 포함)과 가구 수를 곱한 값을 시도별로 시점(연도와 월)별로 합산하여 시도별 총량을 구하였음. 표의 값은 해당 총량을 동월에 대하여 2020년도 값에서 2019년 값을 제한 것임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4〉 시도별 가구 체크카드사용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단위: %)

시도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서울	4.99	1.42	-11.03	-9.83	-1.24	11.44	3.66
부산	6.31	6.44	4.93	18.91	22.56	33.30	25.67
대구	10.28	1.17	-15.65	-9.54	0.28	11.70	4.16
인천	-0.87	-4.99	-13.21	-12.94	-3.57	7.79	6.29
광주	5.60	1.00	-5.57	-5.03	5.58	17.26	5.08
대전	5.78	-0.04	-10.08	-8.40	7.48	32.35	32.07
울산	6.02	-0.08	-14.41	-7.18	8.54	26.35	15.84
세종	36.87	30.79	17.38	30.71	49.76	30.92	27.46
경기	6.52	0.12	-6.76	-9.31	-4.89	7.87	3.82
강원	7.26	-0.84	-9.14	-6.28	2.16	13.68	9.78
충북	7.58	-1.13	-9.37	-6.49	5.31	14.00	7.03
충남	8.90	1.19	-7.84	-3.74	9.12	14.02	7.88
전북	6.83	0.05	-5.63	-3.65	7.27	18.21	10.57
전남	8.85	1.90	-5.73	-5.57	3.39	13.66	5.64
경북	5.90	-2.38	-17.67	-10.51	2.86	16.93	8.97
경남	6.91	0.01	-10.81	-7.82	2.78	17.41	9.68
제주	4.44	-2.72	-7.53	-8.28	4.66	8.86	1.69

주: 법정동별 평균금액(0 포함)과 가구 수를 곱한 값을 시도별로 시점(연도와 월)별로 합산하여 시도별 총량을 구하였음. 표의 값은 해당 총량을 동월에 대하여 2020년도 값에서 2019년 값을 제한 것임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5〉 시도별 가구 현금서비스 금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분

(단위: 억원)

시도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서울	-681	-60	-101	-1,047	-1,036	-564	-1,301
부산	-187	11	-47	-389	-388	-172	-435
대구	-47	86	41	-200	-235	-175	-345
인천	-211	-38	-84	-332	-343	-240	-455
광주	-60	28	-9	-137	-128	-9	-101
대전	-111	-16	-45	-160	-147	-105	-176
울산	-83	-3	-33	-123	-132	-52	-120
세종	36	54	55	28	27	3	-21
경기	-637	116	-39	-1,313	-1,302	-658	-1,646
강원	-76	3	-46	-151	-157	-83	-156
충북	-72	18	-28	-131	-123	-68	-146
충남	-60	73	40	-106	-102	-66	-164
전북	-95	-5	-36	-145	-138	-53	-149
전남	-76	21	-17	-123	-123	-70	-152
경북	-141	-2	-75	-245	-262	-166	-286
경남	-224	-12	-88	-323	-317	-130	-356
제주	-11	22	-9	-43	-45	-20	-56

주: 법정동별 평균금액(0 포함)과 가구 수를 곱한 값을 시도별로 시점(연도와 월)별로 합산하여 시도별 총량을 구하였음. 표의 값은 해당 총량을 동월에 대하여 2020년도 값에서 2019년 값을 제한 것임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6〉 시도별 가구 현금서비스 금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단위: %)

시도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서울	-7.41	-0.70	-1.11	-11.87	-11.42	-6.77	-14.36
부산	-5.66	0.36	-1.42	-12.00	-11.67	-5.73	-13.36
대구	-2.37	4.60	2.03	-10.23	-11.69	-9.04	-16.52
인천	-7.20	-1.37	-2.84	-11.63	-11.66	-8.83	-15.51
광주	-5.12	2.57	-0.72	-11.84	-10.73	-0.83	-8.65
대전	-8.47	-1.34	-3.41	-12.70	-11.39	-8.61	-13.44
울산	-7.69	-0.28	-3.05	-11.66	-12.08	-5.24	-11.33
세종	19.41	31.66	29.65	15.32	14.50	1.31	-9.12
경기	-5.25	1.03	-0.32	-11.13	-10.75	-5.89	-13.58
강원	-6.27	0.29	-3.64	-12.57	-12.73	-7.27	-12.89
충북	-6.13	1.61	-2.38	-11.34	-10.34	-6.09	-12.25
충남	-4.23	5.54	2.77	-7.60	-7.14	-4.84	-11.12
전북	-7.91	-0.47	-2.97	-12.24	-11.32	-4.69	-12.13
전남	-6.82	2.03	-1.51	-11.16	-10.78	-6.56	-13.23
경북	-7.50	-0.11	-3.94	-13.35	-13.78	-9.39	-15.14
경남	-7.78	-0.44	-3.05	-11.63	-11.15	-4.95	-12.57
제주	-2.25	4.49	-1.70	-8.47	-8.50	-3.93	-10.38

주: 법정동별 평균금액(0 포함)과 가구 수를 곱한 값을 시도별로 시점(연도와 월)별로 합산하여 시도별 총량을 구하였음. 표의 값은 해당 총량을 동월에 대하여 2020년도 값에서 2019년 값을 제한 것임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7〉 시도별 가구 대출금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분

(단위: 억원)

시도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서울	53,654	67,465	108,362	112,604	112,306	118,946	125,118
부산	17,118	11,385	26,785	25,760	24,908	35,513	39,022
대구	33,472	34,074	34,690	35,169	35,092	17,711	17,187
인천	20,588	20,305	29,761	31,730	32,312	28,295	29,496
광주	5,117	2,637	2,895	3,706	3,626	13,141	14,214
대전	5,370	7,310	8,606	9,812	9,607	12,863	14,434
울산	-7,480	-7,970	-5,229	-4,806	-5,014	-1,378	-1,078
세종	26,040	26,593	28,546	28,778	29,208	8,521	8,321
경기	145,594	151,026	193,454	195,766	188,126	170,622	171,440
강원	5,522	5,648	5,614	3,759	2,226	7,147	6,683
충북	8,348	7,670	5,612	4,706	3,854	-163	-1,939
충남	10,876	11,755	18,067	17,970	19,431	12,046	11,592
전북	4,478	3,115	1,705	2,323	181	3,543	2,731
전남	9,952	9,631	10,350	11,359	10,810	15,376	14,666
경북	-3,395	-3,066	-581	-1,991	-4,825	425	635
경남	-13,859	-16,058	-13,633	-14,639	-17,540	-10,410	-9,787
제주	-1,331	-1,586	-3,586	-4,164	-5,450	-4,861	-5,114

주: 법정동별 평균금액(0 포함)과 가구 수를 곱한 값을 시도별로 시점(연도와 월)별로 합산하여 시도별 총량을 구하였음. 표의 값은 해당 총량을 동월에 대하여 2020년도 값에서 2019년 값을 제한 것임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8〉 시도별 가구 대출금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단위: %)

시도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서울	2.21	2.78	4.49	4.65	4.62	5.01	5.24
부산	2.49	1.64	3.84	3.68	3.55	5.27	5.78
대구	6.94	7.06	7.14	7.21	7.16	3.49	3.37
인천	3.05	3.00	4.37	4.64	4.69	4.15	4.31
광주	1.76	0.90	0.98	1.25	1.22	4.54	4.87
대전	1.86	2.53	2.99	3.39	3.31	4.43	4.95
울산	-2.76	-2.95	-1.94	-1.79	-1.86	-0.52	-0.41
세종	32.20	32.97	34.82	35.09	35.62	8.41	8.16
경기	4.29	4.45	5.68	5.72	5.48	4.98	4.98
강원	2.07	2.11	2.09	1.39	0.82	2.66	2.48
충북	2.91	2.68	1.95	1.63	1.33	-0.06	-0.65
충남	2.64	2.86	4.39	4.35	4.69	2.87	2.75
전북	1.44	1.00	0.54	0.74	0.06	1.12	0.86
전남	3.57	3.44	3.66	3.99	3.77	5.42	5.12
경북	-0.75	-0.67	-0.13	-0.44	-1.05	0.09	0.14
경남	-1.95	-2.26	-1.92	-2.06	-2.47	-1.49	-1.40
제주	-0.75	-0.90	-2.01	-2.32	-3.01	-2.71	-2.84

주: 법정동별 평균금액(0 포함)과 가구 수를 곱한 값을 시도별로 시점(연도와 월)별로 합산하여 시도별 총량을 구하였음. 표의 값은 해당 총량을 동월에 대하여 2020년도 값에서 2019년 값을 제한 것임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저자약력

김문정

고려대학교 영문학,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우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매디슨캠퍼스 경제학 학사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매디슨캠퍼스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Covid-19 대응 재정정책 설계를 위한 경제현황 기초 분석 - 신용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

2021년 10월 25일 인쇄
2021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8,000원

조판 및
인쇄 (주)다원기획 (044)865-8115

I S B N 979-11-6655-082-9



Covid-19 대응 재정정책 설계를 위한 경제현황 기초 분석

- 신용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